

충청남도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입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연구 : 주변지역지원제도 도입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논의를 중심으로

이민정

발 간 사

대산석유화학단지는 1988년부터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대죽리 일원에 조성된 민간산업단지로서 2000년대 중반이후 대규모 설비증설과 함께 대중국 수출 급성장으로 성장 가속화하여 현재 7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종사자 1만5천여명 규모의 단지로 성장하였습니다. 대산5사(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케이씨씨)의 연간매출액은 2014년도 기준으로 41조259억원에 달해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고 충남지역 2위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산5사가 매년 4조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부는 398억원에 그쳐 국세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처럼 시설폭발, 기름유출, 운송 수송과정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주민들은 항상 잠재적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에서는 정책담론회, 국회의원 발의 등을 통해 현재 주변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마련을 모색하고 있고,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의 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의성있는 연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산업경제연구부의 이민정 박사와 본 연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많은 도움과 수고를 해주신 원내외 자문위원 및 심의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1월 31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연구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석유화학산업은 자동차, 석유와 함께 3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산업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이 세계적 위상을 갖는 과정에서 여수, 울산, 서산 대산의 3대 석유화학단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석유화학 원료 및 중간재를 생산하고 있다.

대산단지는 1988년부터 충남 서산시 독곶리, 대죽리 일원에 민간기업들 주도 하에 민간산업단지로 조성되기 시작하여 현재 약 70여개 기업, 1만5천여명이 종사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특히 1990년대 초반, 대산석유화학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되면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능력이 급증하였고 대산 5사(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는 매년 국세로 4조 4천억원 정도를 납부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크지만, 지방세 납부는 이의 1%에도 못미치는 점이 근년 문제시되었다.

또한 대산석유화학단지 소재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야기되는 외부불경제, 이에 대한 내부화 장치 미흡에 관한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석유화학단지 조성 이후 주민들은 크고 작은 사고들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생활불편, 환경오염, 건강피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다른 시설들(예. 발전소, 송변전설비,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지역자원시설세, 주변지역 지원금 등을 통해 외부불경제의 내부화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반면, 석유화학단지에는 이러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 등을 아우르면서 신세원 발굴에 대한 논거정립, 지원금/과세에 있어 예상논쟁점 등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2. 충남도 에너지정제/저장시설 소재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특히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경우, 국가에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개별공단이라는 이유로 SOC가 부족하여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기업경쟁력 및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가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이에, 외부불경제 내부화를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를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한 석유화학단지에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생각해볼 수 있는 지원방안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이다. 현재 발전소, 송변전설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댐 등에 시행중이며, 이들 시설을 기준으로 2~5km 이내 지역에 주민복지,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의 지원목적은 해당지역 관련시설의 개발촉진 및 시설의 원활한 운용 도모, 주민의 수용성 제고에 있는데, 불투명한 사업 결정과정, 타당성 검증 부실, 회계투명성 확보장치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충남도에서 이미 시행중인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에 비추어 동 제도 도입을 고려할 때, 지원금의 목적(보상금이 아닌 보조금), 도(道)개입여부 등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원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과세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발전, 환경보호 등의 필요재원 확보 및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공공시설의 필요비용 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세이자 목적세. 특히, 특정자원분은 특정지역의 부존자원 채굴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 대응을 위해 지역보상차원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도 화력발전소에 대해 2014년도부터 과세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서 취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다양한 조세 및 부담금을 부과하여 외부불경제 내부화 조정을 위해 과세하고 있으나, 실질적 피해를 입는 기초지자체에 돌아오는 세수는 극히 일부분이다.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연간 약 26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대산단지 및 보령LNG비축시설의 2013년도 연간처리량으로 계산). 단, 조세저항, 이중과세(석유류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이미 과세중), 과세형평성 등에 대한 논쟁이 예상된다.

셋째,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의 지침변경 제안이다. 석유류에 대한 각종 부담금은 모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이 되고 있다. 동 회계에서 석유류의 조달재원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류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 안전 등에 관련된 지출은 매우 저조

한 것이 현실이므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의 세출항목 지침변경 제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한가지 더 제안하자면, 서산시 조례제정을 통해 대산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서산시 자체의 노력과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례제정을 통해 시 차원의 지원근거를 수립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3. 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

일본에서는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등 교부금규칙(1978년 통산산업성 고시 제434호)를 통해 석유저장기지, 제유소, 유조소 등 석유저장시설이 입지한 현(광역지자체), 시정촌(기초지자체), 주변 시정촌에 대해 석탄석유 및 석유대체에너지대책 특별회계에서 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다. 석유저장시설의 입지가 타산업에 비해 관련산업이 적어, 입지 지자체에 있어서는 고용·재정적 측면의 메리트가 적은 반면, 시설 입지에 따르는 소방력, 방재도로 건설 등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이에 교부금 교부를 통해 시설입지에 따르는 재정부담 경감, 지역경제 발전 및 복지향상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설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혹은 일부금액을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있는데, 교부액 한도는 시정촌에 입지한 석유저장시설 저장량에 따라, 교부규칙에서 정하는 단가와 계수를 곱한 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교부대상은 도로, 항만, 도시공원, 수도,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시설, 통신시설, 환경위생시설, 교육문화시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국토보전시설, 소방관련시설, 농림수산업관련 공동시설, 상공업 기타산업관련 공동시설 등의 15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교부금 사무절차를 국가-현(광역)-시정촌(기초)의 3단계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입지시정촌(기초)는 사업신청, 교부신청, 사업실시 및 경과/결과보고, 지불청구 등을, 현(광역)은 시정촌 신청사업 심사, 시정촌 보고내용 수리 및 국가에의 보고를, 국가는 교부액 결정, 교부여부, 사업실적 최종심사를 담당하여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이처럼 현(광역)을 포함한 3단계 절차제도를 구축하여 교부금 사용의 컨트롤과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유도하고 있는 점과, 노후시설 및 안전확보대책에 적극적이도록 석유사업자와 협력을 이끄는 시스템구축 노력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4. 제언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의 관리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지역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시설 관련 정보수집, 정책수립 및 집행·관리·감독 등을 지방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행정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문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에 소재한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에 대한 과세는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3대 석유화확단지 중 하나인 대산단지는 지난 30여년간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국가경제를 위해 지역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모습이 대산단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산단지의 대산5사가 1년간 납부하는 국세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방세 세수와, 단지주변 주민들의 환경오염, 교통사고, 잠재적 대형사고 등에의 노출, 그럼에도 개별산단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대처와 지원, 해결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산단지의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험시설물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과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지침 변경(「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세출항목에 석유류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 지원관련내용 추가), 서산시 조례제정 등 4가지를 제안해보았다.

단 다음과 같은 점을 예상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 추진시, 지원주체가 정부인지 입지기업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 지역자원시설세 신세원으로 발굴 추진시, 관련 지자체수가 적다는 약점(관련지자체가 전국적으로 5곳에 그쳐 결집력이 약하다는 한계), 도(道)의 개입여부 등을 생각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처럼, 사업선정의 3단계 절차구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효율적 재원활용을 위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지역자원시설세 신세원 발굴의 논거	7
1. 도입목적의 이론적 고찰	7
1) 외부불경제와 원인자 부담원칙	7
2) 행정비용 보전과 과세형평성 확보	9
2. 선행연구	13
1) 과세확대방안에 대한 연구	13
2) 에너지 저장시설 및 주변지역의 사회적비용 관련연구	13
(1) 대산석유화학단지 관련연구	13
(2) 기타석유화학단지 관련연구	15
3) 석유화학단지 (기업)활용 및 지역연계방안	16
3. 사례분석	18
1) 해외사례 : 일본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교부금	18
2) 국내사례 : 기타 신세원 논의사례	27
3) 시사점	29
제3장 충남도내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 대한 과세방안	31
1.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산업개요 및 납세현황	31
1) 산업개요	31
2) 납세현황	35

2.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과세 및 지원책	38
1)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38
2)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	43
3. 예상쟁점	48
 제4장 결론 및 제언	51
 참고문헌	57
 부록	
①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등 교부금교부 규칙	59
② 일본 후쿠시마현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등 교부금교부 요강	68
③ 일본 후쿠시마현 히로노정 방재행정무선정비사업기금 조례	73
④ (아이치현) 타치시 석유저장시설입지등 교부금기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74

표 차례

[표 1] 국내 석유화학단지 현황	2
[표 2] 연도별, 업종별 중대산업사고 발생현황	3
[표 3] 석유화학공장 사고의 3가지 형태	4
[표 4]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피해사례	4
[표 5] 에너지 정제·저장시설물 소재 지자체 세출현황(2013년도)	9
[표 6] 시설별 주변지역 지원제도	11
[표 7] 화력발전소별 지원금 (2011년~2013년)	12
[표 8]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 교부금액 산출방법	19
[표 9] 후쿠시마현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교부금 교부실적	21
[표 10] 후쿠시마현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교부금 활용사업 개요(2012년도)	22
[표 11] 한일 지방세체계 비교(2010년 기준)	26
[표 12] 서산지역 주요 석유화학업체 현황	33
[표 13] 충남 석유화학산업의 생산추이	34
[표 14] 충남 석유화학산업 고용 추이	34
[표 15] 충남 석유화학산업 고용 추이	35
[표 16] 대산5사 세목별 국세 납부현황 (2013년도)	36
[표 17] 대산5사 지방세 납부현황	37
[표 18] 대산5사 세목별 지방세 납부현황 (2013년도)	37
[표 19] 에너지세제 부과 현황	40
[표 20]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42
[표 2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종류	44
[표 22] 기본지원사업의 내용	45
[표 23] 주변지역 지원사업 흐름	47
[표 24]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관련조례(당진시)	47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의 흐름	6
[그림 2] 외부불경제 유발시설과 조세	8
[그림 3]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교부금 사무흐름	20
[그림 4] 일본 석유관련 과세흐름(2015년 예산)	25
[그림 5] 석유화학산업의 개요	31
[그림 6] 대산석유화학단지 개요	32
[그림 7] 화력발전소 관련 지방세 및 주변지역 지원금 흐름도	46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생산액에서 2013년도 기준 110조원,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7.3%를 차지하며 자동차, 석유에 이어 3위로, 국가기간산업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산업이다. 특히 에틸렌 환산 생산능력은 2014년도 기준 약 850만ton으로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4위를 자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이 세계적 위상을 갖는 과정에서 여수, 울산, 서산 대산의 3대 석유화학단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석유화학 원료 및 중간재를 생산하고 있다.

대산단지는 1988년부터 충남 서산시 독곶리, 대죽리 일원에 민간기업들 주도 하에 민간산업단지로 조성되기 시작하여 현재 약 70여개 기업, 1만5천여명이 종사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특히 1990년대 초반, 대산석유화학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되면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능력이 급증하였고 대산 5사(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의 연간매출액은 2014년도 기준 41조 259억원에 달해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바도 크다.

이러한 국가적 기여의 이면에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소재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야기되는 외부불경제, 이에 대한 내부화 장치 미흡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되어 왔다. 석유화학단지 조성 이후 주민들은 크고 작은 사고들에¹⁾ 노출되어 있고, 특히 생활불편, 환경오염, 건강피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1) 대산읍지구대에 접수된 교통사고를 보아도, 2013년 284건(부상 55명), 2014년 255건(부상 49명)으로 대형트럭과 탱크로리 왕복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국내 석유화학단지 현황

구분			울산			대산 임해공단	여수국가 산업단지	
				석유화학 단지	여천공단			온산공단
위치		계	소계	남구 상개동, 부곡동, 고사동 일대	남구 여천동, 매암동, 용연동 일대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외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독곶리 일대	여주시 화치동외, 여수국가 산업단지
부지면적(k㎡)		83	44	9	25	10	8	31
업체수		745	470	28	117	325	19	256
저장 위험 물	액체(kℓ)	47,650,487	23,193,101	9,333,843	2,010,126	11,849,132	10,785,955	13,671,431
	고체 (ton)	124,909,337	104,649	56,115	12,649	35,885	39,771	124,764,917
위험물 제조 시설 (개소)	제조소	454	242	82	90	70	64	148
	일반취급소	804	454	136	206	112	67	148
	이송취급소	249	49	19	19	11	17	183
	기타취급소	53	28	6	7	15	1	24
	옥내저장소	416	228	49	91	88	32	156
	옥외저장소	365	230	47	108	75	34	101
	옥내탱크 저장소	150	54	5	26	23	36	60
	옥외탱크 저장소	6,805	3,877	1,187	1,528	1,162	775	2,153
	지하탱크 저장소	65	36	8	9	19	15	14
	암반탱크 저장소	2	2	-	-	2	-	-
	기타저장소	537	230	5	42	183	3	304
총업원		50,717	28,326	4,432	7,215	16,679	4,485	17,906

자료) 소방방재청(2014), 2013년도 위험물 통계자료

석유류를 비롯한 가연성 액체, 에틸렌, 가연성 가스 등 다양한 위험물을 다량으로 저장·취급하고 있는 석유화학단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일반산업재해와 구분하여 중대산업사고(Major Industrial Accident)라 정의하고, “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 상태의 결과로 인한 위험물질의 누출(Release), 화재(Fire), 폭발(Explosion) 등의 발생으로 단기가 또는 장기간에 걸쳐 그 영향이 사업장 내 근로자 뿐 아니

라 인근 지역주민이나 환경에까지 미치는 사고”라 규정하고 있을 정도이다²⁾. 타 산업 경우, 예를 들어, 자동차공장에 사고가 나서 전원이 차단되면 기계작동이 멈추는 것에서 그치지만, 석유화학플랜트는 발열화학반응에 의하여 계속 작동되는 프로세스로 인해 전원이 차단되어도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한다. 또한 석유화학플랜트의 파이프시설은 보통 수십km에 이르는 데,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를 “최대속도로 달리는 기차를 멈출 수 없는 상황” “도시형 화산”에 비유하기도 한다³⁾.

〔표 2〕 연도별, 업종별 중대산업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

	계	‘02	‘03	‘04	‘05	‘06	‘07	‘08
계	55	8	18	11	5	3	4	6
정유	4	-	3	1	-	-	-	-
석유화학	5	1	3	-	-	-	-	1
정밀화학	3	2	1	-	-	-	-	-
화학제품	11	-	1	2	2	1	2	3
도시가스/LPG	1	-	1	-	-	-	-	-
화약제품	3	-	2	-	-	-	1	-
기타화학	18	4	5	6	-	-	1	2
기타산업	10	1	2	2	3	2	-	-

자료) 한국산업안전공단(2008) 「중대산업사고 사례집」

더욱이 1960년~1970년대를 시작으로 성장해온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경제성장 및 수요증가로 증설을 거듭해 현재 30~40여년 이상 가동한 시설을 비롯해, 노후화로 인한 설비교체 및 보수주기가 도래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잠재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석유화학공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국제적으로는, 전술(前述)과 같이, 독성물질 누출, 화재, 폭발의 3가지로 나누고 있다.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화재사고이며, 독성물

2) 안전보건공단(2005) ‘중대산업사고 사례집’

3) 조강식(2012) 발췌. 1990년 이후 국내 중대산업사고는 약 150건으로, 사망 181명, 부상자 585명, 재산피해 1,198억원(잠정추계)에 달함.

질 누출의 경우 치명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또한 폭발의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게 된다(표 3 참조). 이 외에도 석유화학시설에 잠재된 위험요인으로, 플랜트 입지조건 관련, 부적절한 장치설비 배치, 사용조건에 부적합한 구조, 프로세스 상의 문제, 물질이송, 조작 부주의, 설비결함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표 3] 석유화학공장 사고의 3가지 형태

사고형태	발생 가능성	치명 가능성	경제적 손실 가능성
화재	높음	낮음	중간
폭발	중간	중간	높음
누출(독성물질)	낮음	높음	낮음

출처) M&A Protection Consultants (1987) "A thirty year reviews of one hundred of the largest property damage losses in the hydrocarbon-chemical industry"

수송·운송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오염사례도 크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2007년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로, 약 12,547kl의 원유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태안군을 비롯한 충청도 해안~ 전남, 제주도 일부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외에도 나프타 유출, 분해탑 폭발, 운반선 폭발, 탱크로리 전복 등, 주민들은 오염물질 배출, 잠재적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표 4]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피해사례

일시	사고경위	주민피해
'92.2.14	서산 극동정유 분해탑 폭발	반경 1km 이내 5백여주민 대피
'93.10.1	프런티어 익스프레스호 나프타 유출	주빈 157명 구토 및 두통증세 치료
'03.10.16	현대오일뱅크 코크스라인 폭발	정제설비 소실
'07.12.7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피해청구 127,471건(4조 2,273억원)
'09.12.21	현대오일뱅크 부두 기름 유출	병커C유 5,900ℓ 유출
'12.1.3	47t급 폐유 운반선 폭발	1명실종, 1명경상
'14.12.28	탱크로리 전복으로 아스팔트유 유출	아스팔트유 200ℓ 유출
'15.1.15	실리콘원료 탑재 탱크로리 전복	장시간 교통체증 유발

자료) 정중필(2015b)에 가필

정종필(2015a)을 중심으로 신세원발굴을 통한 지방세 확충방안이 논의되어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 대한 과세방안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지원금 혹은 과세 논의가 아직 진행중일 뿐, 논거부족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 등을 아우르면서 신세원 발굴에 대한 논거정립, 지원금/과세에 있어 시도의 역할 등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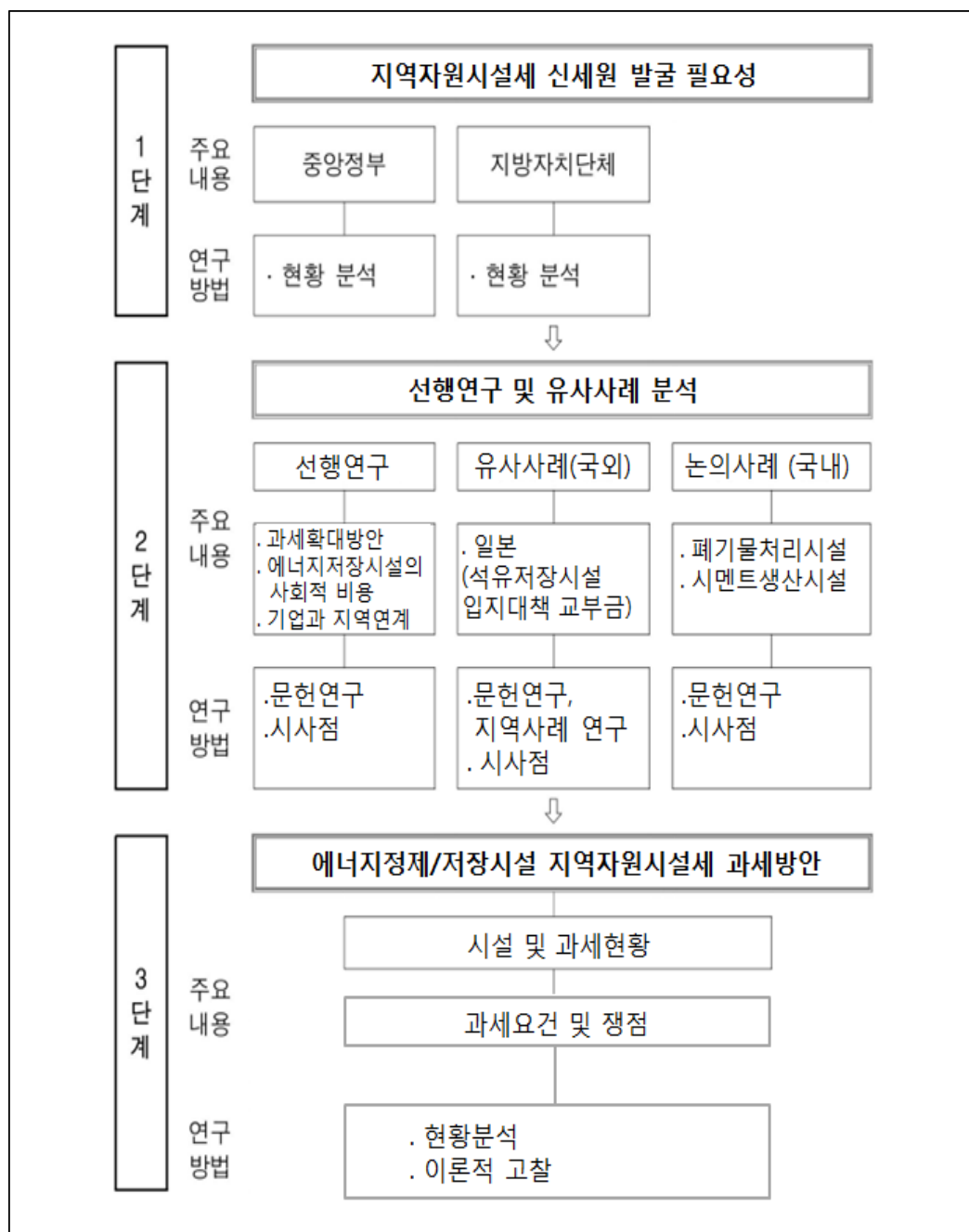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충남 서산시 대산산업단지에 밀집한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의 과세/ 주변지역 지원금의 논거를 마련하고 여기에 있어 시도의 역할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시설이 안고 있는 사고잠재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에 연구를 살펴보고, 국내외 유사사례 등을 분석한다.

전술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시간적 범위는 지방세 세목개편이 이루어진 2011년 이후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단, 석유화학단지의 외부불경제와 관련해서는 이전 연구물을 참조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내용적 범위는 지역자원시설세 신세원 발굴 필요성, 유사 국내외 사례, 에너지 저장/정제시설 과세 논거 마련 등을 중심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선행연구 검토 및 정부자료(통계자료 포함)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정연감」(각년도),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참고한다. 필요에 따라, 에너지 저장/정제시설이 입지한 대산산업단지의 대산 5사(현대오일뱅크, KCC, LG화학, 한화토탈, 롯데케미컬), 충청도 및 서산시 담당공무원, 주변지역 주민 등의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병행한다.

(그림 1) 연구의 흐름



제2장 지역자원시설세 신세원 발굴 논거

1. 도입목적의 이론적 고찰⁴⁾

1) 외부불경제와 원인자 부담원칙

지역에 소재한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위험시설물, 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공장 등)에 대한 과세는 해당 시설을 이용한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기 위한 교정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사적(私的) 경제활동 과정에서 외부불경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 가격은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 또는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경제주체에게 한계외부비용에 상응하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경제주체는 이러한 조세부담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주체는 사적비용과 조세를 합한 사회적비용을 감안하여 경제활동을 조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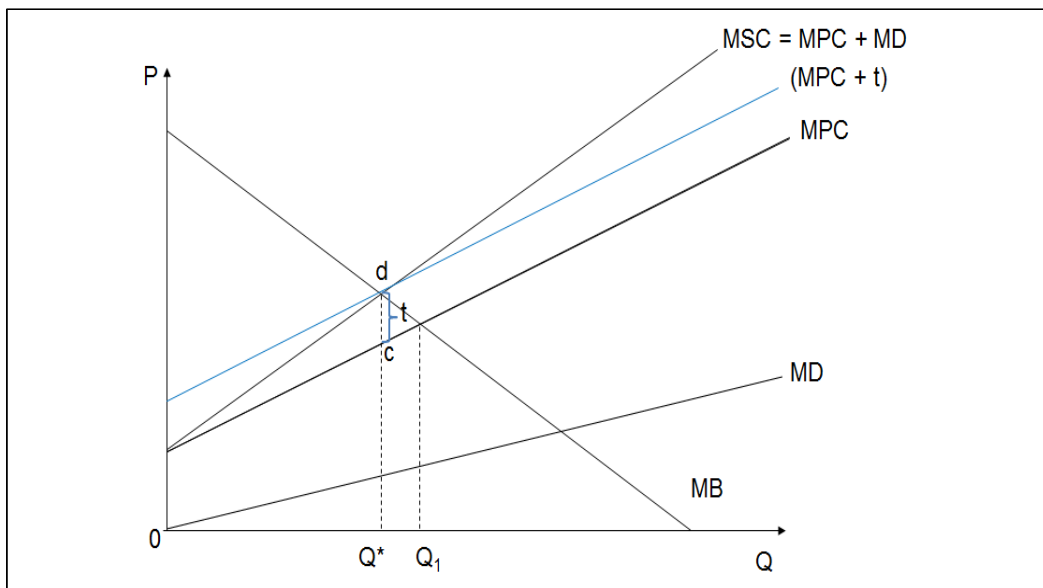
<그림 2>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한 도식이다. 그림에서 MB 와 MPC 는 각각 사적 한계편익과 사적 한계비용을, MD 는 외부불경제 유발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나타낸다. 한편 MSC 는 사적 한계비용과 외부불경제 유발시설로 인한 한계외부비용(MD)을 합한 사회적 한계비용을 나타낸다. 한계외부비용을 고려한 사회적 최적 공급량은 사회적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Q^* 수준이지만 해당 재화의 공급 주체는 외부불경제 유발시설로

4) 정종필(2014) 발췌

인해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사적 한계비용만을 고려하므로 시장공급량은 Q_1 에서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과다공급($Q^* < Q_1$)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내부화하는 방안으로 외부불경제 유발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외부비용에 상응하는 조세($dc = t$)를 재화의 공급 주체에게 부과하면 사적한계비용이 증가하여 사회적 최적수준에서 균형이 달성된다. 조세부과 후 경제주체는 사적한계비용(MPC)과 조세($dc = t$)를 합산한 $MPC + t$ 와 MB 가 일치하는 Q^* 수준만큼 생산하여 사회적 최적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그림 2〕 외부불경제 유발시설과 조세



자료) 정종필(2014). 재인용

주) MB(한계편익), MD(외부비용), MPC(사적 한계비용), MSC(사회적 한계비용)

현재 과세 중인 지방세목 중에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시설에 대하여 과세하는 대표적인 교정과세에 해당한다.

2) 행정비용 보전과 과세형평성 확보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이 지역 내에 위치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는 이들 시설의 관리를 위한 직·간접적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의 경우에도 이들 시설이 지역 내에 위치함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를 위한 행정수요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들 시설은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남 등에 편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표 5] 이다.

[표 5] 에너지 정제·저장시설물 소재 지자체 세출현황(2013년도)

(단위: 억원, %)

	전체(시·도)		소재 자치단체		비소재 자치단체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합계	892,904	100.0	396,818	100.0	496,086	100.0
일반공공행정	155,864	17.5	66,862	16.8	89,003	17.9
공공질서및안전	25,594	2.9	13,472	3.4	12,122	2.4
교육	85,105	9.5	40,435	10.2	44,670	9.0
문화및관광	40,423	4.5	16,535	4.2	23,888	4.8
환경보호	43,157	4.8	23,817	6.0	19,340	3.9
사회복지	245,101	27.4	106,910	26.9	138,191	27.9
보건	15,866	1.8	6,684	1.7	9,182	1.9
농림해양수산	68,009	7.6	37,859	9.5	30,149	6.1
산업·중소기업	21,360	2.4	6,866	1.7	14,495	2.9
수송및교통	74,893	8.4	28,991	7.3	45,901	9.3
국토및지역개발	52,898	5.9	22,160	5.6	30,738	6.2
과학기술	3,531	0.4	1,673	0.4	1,858	0.4
예비비	0	0.0	0	0.0	0	0.0
기타	61,104	6.8	24,555	6.2	36,549	7.4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2014). 재인용.

시설 소재 시·도와 비(非)소재 시·도의 세출 기능별 지출을 보면⁵⁾ 시·도 자치단체는 평균적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하여 전체 세출대비 2.9%를 지출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전체 세출 대비 4.8%를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 정제 및 저장시설이 소재하는 시·도의 경우, 전체 세출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은 3.4%,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6.0%를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지출 비율은 에너지 정제 및 저장 시설이 그렇지 않은 시·도의 2.4% 및 3.9%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에너지 정제 및 저장시설과 같이 지역에 소재하면서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시설로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매립장, 폐기물 처리장, 송전탑, 화장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시설들 가운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이들이 유발하는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교정과세의 한 형태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을 과세하고 있다. 이들 시설에 대해 발전을 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발전량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은 Kwh당 1.0원, 화력발전은 Kwh당 0.3원을 과세한다.

한편,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들이 주변지역에 야기하는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방안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현재도 일부 시설에 대하여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주변지역 지원제도가 시행중인 시설로는 발전소, 송·변전설비, 폐기물처리시설, 댐 등이 있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지원을 하고 있다. 주로 이들 시설을 기준으로 2~5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지원, 주민복지,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한다.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은 산정기준에 따라 원인제공자(사업자, 배출자)가 부담하거나 국가 및 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충당하고 있다.

5)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서 취급하는 석유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위험물 중 제4류인 인화성 액체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험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1항에서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제2항에서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의 상황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은 시·도에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시설별 주변지역 지원제도

구분	지원대상	재원산정기준	지원사업	지원재원
발전소	시설주변 5km 이내	발전량	소득증대, 주민복지, 육영사업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발전사 자기자금
송·변전설비	시설주변 600~1,000m	회선길이, 변전용량	소득증대, 주민지원, 육영, 주민복지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발전사 자기자금
폐기물처리시설	시설주변 2km 이내	공사비, 수수료의 10% 이내	소득증대, 복리증진 등	출연금, 수수료
댐	시설주변 2~5km 이내	총저수용량 등	지역지원, 주민지원 등	건설사업자 및 자치단체 부담금
주한미군 공여지	법률에 명시된 지역	차등보조율, 조세 감면 등	고용안정사업, 교육지원, 사회기반시설 지원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자료) 정종필(2015b)

이 중,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기도 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전소 인근 5km 이내 지역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각종 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충남도에 입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표 7]에서 보듯 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4개 시군(당진, 태안, 보령, 서천)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발전사업자지원을 통해 매년 약 275억원에 해당하는 재원이 지원되고 있다. 여기에 2014년부터 과세된 지역자원시설세 세수로 매년 237억원(2015년도 세수예상액 중 입지시군 65% 해당액. 발전소 증설로 인해 더욱 증가 예정)이 해당 시군에 배분되므로,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지역에 매년 500억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고, 발전소 증설계획을 고려하면 향후에는 더욱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다.

[표 7] 화력발전소별 지원금 (2011년~2013년)

발전원	주관기관	발전소명	용량 (MW)	지원단가 (원/kwh)	년도	지원금액 (백만원)	비고
유연탄	(주)한국 동서발전	당진화력	4,000	0.15	2011	10,316	#1~8(가동중)
					2012	14,657	
			2,000	0.15	2013	10,701	#9~10(건설중) (’11. 6 ~ ’16. 6)
					소 계		
유연탄	(주)한국 서부발전	태안화력	4,000	0.15	2011	4,732	#1~8 (가동중)
					2012	4,663	
			2,100	0.15	2013	12,307	#9~10 (건설중) (’12. 5 ~ ’16.12)
					소 계		
유연탄	(주)한국 중부발전	보령화력	5,350	0.15	2011	4,940	보령#1~8, (유연탄) 보령복합#1~3 (LNG)
					2012	5,595	
					2013	5,708	
			신보령화력	2,000	0.15	2013	6,483
소 계						22,726	
무연탄	(주)한국 중부발전	서천화력	400	0.3	2011	716	
					2012	777	
					2013	820	
					소 계		

자료) 충남도청 내부자료 및

산업통상자원부(2013) ‘2014년도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사업계획 수립지침(안)’

2. 선행연구

1)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방안

정종필(2014)은 지방세 확충을 통한 안정적 지방재정기반 구축의 틀 안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개편방안을 모색하여, 특정자원분의 과세대상 확충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과세 확대대상으로 제안된 것으로는 폐기물,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 및 위험시설물이다. 첫째,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폐기물 중 소각 및 매립되는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하며, 과세목적은 폐기물 매립억제 및 재활용 촉진이다. 둘째, 항만이용 화물은 시·도내에 위치한 항만을 통해 운송되는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을 대상으로 한다, 단, 수출화물에 대한 컨테이너세 부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악화를 우려하여 과세를 중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위험시설물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열거된 위험물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단, 동 사업관련 사업자는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규모 위험시설물로 한정된 후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민정(2014a)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기초와 특별회계 운용시군의 활용현황을 소개하는 연구를 통해 충청도의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에 있어 활용목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원자력발전 특별회계 운영 시도 및 에너지관련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서울시 사례를 들어 충청도의 지역자원시설세 운영의 구상방향을 제안했다.

(기타세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방안 관련연구는 이민정(2014a)의 선행연구부분을 참조요망)

2) 에너지저장시설 및 주변지역의 사회적 비용

(1) 대산석유화학단지 관련연구

김복희(1993)는 대산임해공업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밝히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산지역의 입지특성 및 조건분석을 통해 해안매립을 통한 공업용지 구득의 용이성이

두드러짐을 밝혔고, 배후도시로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제3공단이 처음 가동된 시기인 1989년 이후, 인구·토지·교통·서비스 산업 면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또한, 주변지역의 도로교통량이 증가하고 공업기반의 서비스산업이 발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산지역의 문제점 및 과제로 주변지역과의 접근성 문제를 거론하고 연결도로 및 도로망 확립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체계적 용수공급문제와 지역내 제조업 유치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교육·문화·의료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의 확충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1994) 조사에서는 악취, 지하수오염, 배기가스 배출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오염이 우려되며 주민들이 악취공해, 소음공해, 배기가스공해, 해양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2004)의 「대산3사 영향권역 주민환경 역학조사」에서는 대산 석유화학단지과 인접한 3개 시·군의 연령표준화사망률(SMR, 1천명분의 1)이 전국 평균인 5.302SMR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산시 6.55 SMR, 태안군 6.352 SMR, 당진군 6.158 SMR). 특히 대산항 앞 바다에서 발생한 ‘프런티어 익스프레스호’의 나프타 유출 사고 이듬해인 1994년 서산시의 SMR은 전국 평균인 5.39의 2.6배인 14.51로 집계되었다.

김병빈(2004)은 대산공단 주변지역의 악취공해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대산지역을 비롯한 당진, 안면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악취에 대한 인식도, 비특이적 자각증상, 가족질병발생 등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결과, 대산공단 주변지역인 대산과 당진이 비교지역인 안면도보다 악취로 인한 비특이적 자각증상 및 가족질병상태 분석에서 2~3배 높게,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정도와 불면경험도 비교지역보다 2~8배 차이를 보였다. 대산지역에서 이러한 질병발생은 1995년을 정점으로 나타나, 악취공해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태웅 외(2011)은 서산 대산공단 악취실태 조사연구에서 복합악취가 조사기간 동안 희석배수의 3~7배로 나타났음을 밝혀냈다.

국립환경과학원 백성옥(2012)은 대산지역을 중심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조사, 위해성평가를 실시해, 측정된 농도와 물질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산지역의 특징적 우선관리대상물질을 선정했다. 여수, 울산, 대산지역의 경우 우리나라 대표적 석유정제 산단지역으로, 공업지점(대죽리, 독곶리)이 주거지점(대산읍)보다 벤젠, 1,2-다이클로로에탄, 톨루엔, 에틸벤젠, m,p-자일렌 등 화학물질수치와 중금속 농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단, 중금속

농도는 대기환경기준보다 낮음). 연구결과, 우선관리대상 3개물질과 발암/발암우려물질 8개의 총 11개 물질이 파악되었는데, 배출빈도가 높은 업종으로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원유정제처리업'이 파악되었다.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요공정은 '저장시설, 이송·운반·분배·계량시설, 화학반응공정, 분리·정제공정,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5개 공정으로 나타났다.

정석호 외(2014)는 대산지역에 석유화학단지가 개발되면서 농어촌지역의 지역경관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석유화학단지 조성과 대규모 간척사업은 해안선 변화와 어촌해체를 불러왔다. 간척사업으로 조업과 어획장이 사라지면서 어촌과 주변 자연마을도 소멸했다. 취락경관에도 변화가 일어, 대산을 중심지에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유흥시설 등이 급속히 증가해 시가지 형태와 도로배열 등이 비효율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2000년대 이후 도시인프라 확충이 진행되고 있다. 결과, 대산읍의 지역경관은 북부 2차산업, 남부 3차산업, 동·서부 1차산업 중심의 경관적 특성을 지니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기타 석유화학단지 관련연구

노삼규 외(1993)의 연구에서는 울산 석유화학단지를 사례로 석유정제 관련시설 및 규모가 가장 큰 유공(당시)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 소방위험구역 대상지로 위험물 취급 및 저장에 의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요소로부터 보존되어야 할 지역으로 피난구조 대상시설로서의 연소저지용 도로와 대피장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화학공업의 모체인 관련기업들에 따른 환경공해의 만성화 및 안전사고들이 동 지역 도시생활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풍부한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원동력이 공업이라는 점에서 도시의 환경지향과 공업 간의 현실적 타협이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했다. 기업의 방재대책 수립과 피해상징에 따른 부지내 관리, 지역의 방재대책이 재해위험지역과 시가지를 포함한 인구과밀지역의 보호격리차원의 도시계획적 접근이 수행될 수 있는 제도·기술의 축적, 재원확보가 중요함을 주장했다.

정정삼(2010)은 여수산업단지의 사고사례 등을 분석하여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개선을 주장했다. 여수산업단지의 경우, 1967년 공단이 조성된 이래, 2014년 현재 약 200개업체가 가동중에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석유화학산업단지이다. 2008년 기준 3조 9129억원의 국세

와 529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등, 경제적 기여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외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사고사례를 소개하여,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철저한 안전관리제도 확립을 주장하고 있다.

조강식(2012)은 울산석유화학단지를 사례로 화재위험성을 분석하고, 석유화학단지의 예방 대책, 긴급대책, 방호대책을 제시하였다. 울산석유화학단지의 경우, 1962년 울산공단에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어, 석유화학 콤비나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주거지역과 매우 근접하여 단지가 입지한 관계로 사고발생시 인근주민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안전, 소방, 환경분야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석유화학단지(기업) 활용 및 지역연계방안

유남훈 외(2010)는 국제환경협약 강화에 따른 기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가 요구되는 근년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생태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생태적 공간계획 및 자원순환네트워크 구축방안을 고민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경우, 정유사, 석유화학사는 물론, 인근 화력발전시설 등 자원순환네트워크 구축을 필요로 하는 에너지·용수 다소비업종이 분포했고, 이들 기업은 업종 특성상, 독성 및 유해물질, 폐기물 및 부산물 배출이 많아 물질교환 및 이용정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생태적 공간조성을 위한 4대 핵심 과제로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 친환경 교통인프라 구축, 생태녹지축 구축, 교육문화공간 조성을 주장했다. 자원순환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유, 석유화학, 관련기업들 간의 부산물, 폐기물 연계, 나아가 지역간 물질교환 연계가 이루어지는 광역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경섭(2011)은 근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존의 자선적·시혜적 기부활동에서 벗어나 사회적 투자개념을 기업경영에 접목시킨 ‘전략적 사회공헌활동(Strategic Philanthropy)’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여수산단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지역민 이주의 아픔과 환경오염, 각종 안전사고 등 지역민의 고통을 감안하면 지역기여도가 낮고 사회적 책임 또한 지역민의 요구수준과 다소 괴리가 있어왔다. 여수산단의 GS칼텍스가 공익재단을 출범시켜 사회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단 전체기업의 자발적 참여확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생협력의 문화 조성, 기업의 지역사회공

현 시스템 구축, 적극적 행정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휘문(2014)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지방재정 수입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성과가 지방세로 귀속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이론적으로 편익과 비용부담이 일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문제점과 실제로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방재정을 투자가능한 유인상실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방법인세 도입,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에 반영, 국고보조금과의 연계, 기금설립(이후 해당지역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사례분석

1) 해외사례 : 일본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교부금

일본은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등 교부금규칙(1978년 통상산업성 고시 제434호)에 근거하여, 석유저장기지, 제유소, 유조소 등 석유저장시설이 입지한 현(광역지자체), 시정촌(기초지자체), 주변시정촌에 대해 석탄석유 및 석유대체에너지 대책특별회계에서 교부금을 교부한다. 석유저장시설 입지는 타산업 입지에 비해 관련산업이 적고, 입지시정촌에 있어서는 고용면, 재정면에 끼치는 메리트가 작은 반면, 입지에 따르는 소방력 필요, 방재도로 건설 등 지자체 재정에는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입지곤란의 큰 요인이 되어왔다. 이에, 1978년에 석유저장시설 입지를 촉진하기 위해 입지시정촌 등에 대해 공공시설 등의 정비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을 교부함으로써 시설입지에 따르는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본 제도를 만들게 된다.

해당 시정촌에 대해 석유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따라 필요한 시설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있다. 즉, 석유저장시설이 새로이 증설되는, 혹은 기존에 설치된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석유저장시설의 설치 원활화, 수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부액의 한도는 당해 시정촌에 존재하는 석유저장시설(신·증설의 경우, 1기당 석유 6만kl 이상, LPG 3만t 이상, 기존시설의 경우, 1시정촌당 석유·LPG 합계량 10만kl 이상)의 저장량에 따라 교부규칙에서 정하는 단가와 계수를 곱한 액으로 한다.

교부대상시설은 도로, 항만, 어항, 도시공원, 수도,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시설, 통신시설, 환경위생시설, 교육문화시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국토보전시설, 소방 관련 시설, 농림수산업 관련 공동이용시설, 상공업 기타 산업(농림수산업 제외) 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15가지 시설을 대상으로 교부한다.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등 교부금교부규칙 제5조에서는 교부한도액에 관해 정하고 있다. 교부한도액은 2가지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1978년4월1일 이후 신설 및 증설로 인한 폐지전의 직간접 교부사업(=교부대상사업)에 대해서는, 1건당 40억엔을 한도로 석유저장시설 저장량 합계량에 1kl당 800엔을 곱해 얻은 금액을 교부금으로 하고(제1항) 매회계연도마다 석유저장시

설 저장량 합계량이 10만kl 이상의 시정촌당 석유저장시설 저장량 합계량에 따라 다음표의 산식을 통해 산출해 얻은 금액(제2항)의 2가지로 정하고 있다.

〔표 8〕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 교부금액 산출방법

석유저장시설 저장량 합계량 (단위 : kl)	산식
10만 이상 ~ 100만 미만	$A = 0.495V + 11.55$
100만이상 ~ 200만 미만	$A = 0.33V + 28.05$
200만 이상 ~ 500만 미만	$A = 0.165V + 61.05$
500만 이상~ 1000만 미만	$A = 0.0385V + 124.3$
1000만 이상	$A = 0.0044V + 158.4$

참고) A : 교부금의 교부한도액 (단위 : 백만엔)

V : 석유저장시설 저장량 합계량 (단위 : 만kl)

자료) 일본 후쿠시마현 (2014) 「電源三法交付金制度の概要」

이렇게 정해진 교부금은 석유저장시설 설치공사가 개시된 날을 포함한 회계연도부터 당해 석유저장시설 설치공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한 회계연도까지의 기간에 행해지는 교부대상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관해 교부한다.

[그림 3]는 시정촌에서 현, 국가로 이어지는 교부금 사무흐름도로, 각 지자체의 업무와 사무 권한을 알 수 있다.

즉, 저장시설이 입지한 시정촌에서 사업신청, 교부신청, 사업실시 및 경과/결과보고, 지불청구 등을 하면, 광역지자체인 현에서는 시정촌 신청사업의 심사, 시정촌의 보고내용 수리 및 국가에 보고 등을 맡는다. 국가에서는 교부액 결정, 교부여부, 사업실적 최종심사 등을 맡아 교부금 사무를 3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변지역 지원금(ex.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시설입지 기초지자체와 국가(산업자원부)의 직통체계로 운영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0

본 연구에서는 후쿠시마현의 석유저장시설 입지대책사업비를 중심으로 동 지역에 있어 교부금의 사용처와 흐름 등을 살펴보고 교부금 제도의 장단점을 생각해본다.

후쿠시마현의 경우, 입지지역 2곳 및 주변 시정촌 9곳이 교부대상단체로 되어 있고 각 단체에 대한 교부실적(2012년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 9〕 후쿠시마현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교부금 교부실적 (단위: 천엔)

		1978~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입 지	이와키市	1,594,454	59,374	59,599	59,599	59,832	59,599	1,892,457
	히로노町	33,334	23,332	23,332	23,332	23,332	23,332	149,994
	소계	1,627,788	82,706	82,931	82,931	83,164	82,931	2,042,451
주 변	주변1	0	4,999	4,999	4,999	4,999	4,999	24,995
	주변2	42,768	2,885	2,897	2,897	2,908	2,897	57,252
	주변3	42,768	2,885	2,897	2,897	2,908	2,897	57,252
	주변4	42,769	2,885	2,897	2,897	2,908	2,897	57,253
	주변5	42,769	2,885	2,897	2,897	2,908	2,897	57,253
	주변6	42,768	2,885	2,897	2,897	2,908	2,897	57,252
	주변7	42,758	2,885	2,897	2,897	2,908	2,897	57,242
	주변8	34,772	2,885	2,897	2,897	2,908	2,897	49,256
	주변9	52,768	7,690	7,896	7,613	7,907	7,896	91,770
	소계	344,140	32,884	33,174	32,891	33,262	33,174	509,525
시정촌계		1,971,928	115,590	116,105	115,822	116,426	116,105	2,551,976
현(縣)사업		497,612	0	0	0	0	0	497,612
사업계		2,496,540	115,590	116,105	115,822	116,426	116,105	3,049,588
사무교부금		5,830	48	9	52	29	39	6,007
합계		2,475,370	115,638	116,114	115,874	116,455	116,144	3,055,595

자료) 일본 후쿠시마현 (2014) 「電源三法交付金制度の概要」

교부금 사용처는 전술(前述)의 15가지로 다양하나 후쿠시마현의 경우 실제 이용의 대부분은 소방관련시설 구입(소방기자재 구입) 충당에 사용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주변도로 보수 등에도 사용하고 있다.

〔표 10〕 후쿠시마현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교부금 활용사업 개요(2012년도)

교부금사업 명칭	교부금사업 개요	총사업비 (천엔)	교부금충당액 (천엔)
소방펌프자동차정비사업	소방펌프차 1대	27,773	22,398
사찰홍보경차 정비사업	사찰홍보경차 3대	4,568	4,000
	1대	1,701	1,600
전화교환기 정비사업	전화교환기 1대	6,836	6,000
소형동력펌프적재차 정비사업	1대	4,998	4,600
	2대	7,799	7,100
	3대	9,868	9,100
기계적치장 겸 단원집결소 정비사업	1동	9,975	8,400
호스건조탑 정비사업	1기	840	400
	1기	1,743	1,597
모터사이렌 정비사업	1기	1,407	1,000
호스건조탑 정비사업	4기	3,847	2,897
소형동력펌프적재차 정비사업	2대	5,880	2,897
소형동력펌프 정비사업	소형동력펌프 1대	1,523	1,300
	3대	4,189	2,897
방화수조 정비사업	3기	4,515	2,897
방재행정무선사업(기금조성)	1식	26,229	26,229
소형동력펌프적재차 정비사업 (기금조성)	2대	5,554	5,554
방화수조 정비사업(기금조성)	1기	2,342	2,342
소형동력펌프적재차 정비사업 (기금조성)	1대	2,897	2,897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HP(www.enecho.meti.go.jp)

전국시장회 석유기지지자체협의회에서는 2014년 7월, '석유기지대책에 관한 제언'에서 석유비축기지의 종합적 방재체제 정비촉진 등 도모를 위해 다음 5가지를 주장했다. 여기에서 동교부금의 한계점 및 과제를 읽을 수 있다.

1)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교부금 충실

- 동 교부금에 대한 소요의 예산액 확보
- 신청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도모, 교부시기에 관해 지역실정을 반영해 개선도모
- LNG의 교부금대상 포함
- 탄력적 운용을 위해 사업간 유용제한 및 국고보조사업 충당제한 철폐, 교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에 관해서도 탄력적 운용을 가능하도록 할 것
- 교부금 대상사업 확충
 - 대규모재해에 의해 피해를 입은 지자체간에 재해시 상호응원협정에 기반한 응원경비 등에도 충당 가능하도록 하고, 복수년도에 걸친 예산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탄력적 운용을 도모,
 - 대규모 재해시, 긴급소방원조대에 의한 신속한 대응과 광역적 연계강화 도모를 위해, 정보통신설비 등 필요한 기자재 설치에 충당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도모
 - 사다리차 등의 검사·수리 및 관련시설 보수에 관해 기금조성을 통하지 않고 단년도 교부금 대상사업으로 충당가능하도록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 도모
 - 교부금 교부를 받지 않고 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 경비에 관해서도 교부금을 충당할 수 있게 제도개선 도모

2) 석유저장시설의 안전대책

- 재해 및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 안전·방재대책 등의 철폐
 - 방파제 정비, 대규모 화재대책, 시설내 액상화 대책 및 자가발전설비 등의 내진·방조(防潮)대책 강화 도모
 - 공공공사 대상을 공공성이 높은 민유호안(民有護岸) 등으로 확대하고 기업에 의한 안전방재대책을 복수년에 걸쳐 지원하는 구조 도입
 - '산업·에너지 기반강인성 확보조사사업' 조사결과를 토대로 석유화학 콤비나트 지구의

내진성 등의 강화에 대한 지원책 강구

- 2003년 토카치해변 지진에서 콤비나트 화재에 대한 미군의 지원성과를 토대로, 대규모 화재 등 재해시에 미군지원협력체제를 정비
- 동시다발재해 발생시에 즉시대응 가능하도록 초동체제, 연락체제, 수집체제 등 광역 지원체제 정비를 더욱 추진
- 위험물 저장시설 등의 재해시 방재활동 원활화를 위해 부지내 특정통로와 호안 등의 액상화대책을 의무화하고, 동시에, 효율적 피난경로 확보를 위해 인접부지의 방재도로와 연결을 고려한 레이아웃 규제를 실시

- 석유사업자에 대한 지원

- 석유저장시설 등의 노후화대책과 안전확보대책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석유사업자 등을 지원하는 체제 확충
- 석유사업자 등의 경영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석유콤비나트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지원체제 충실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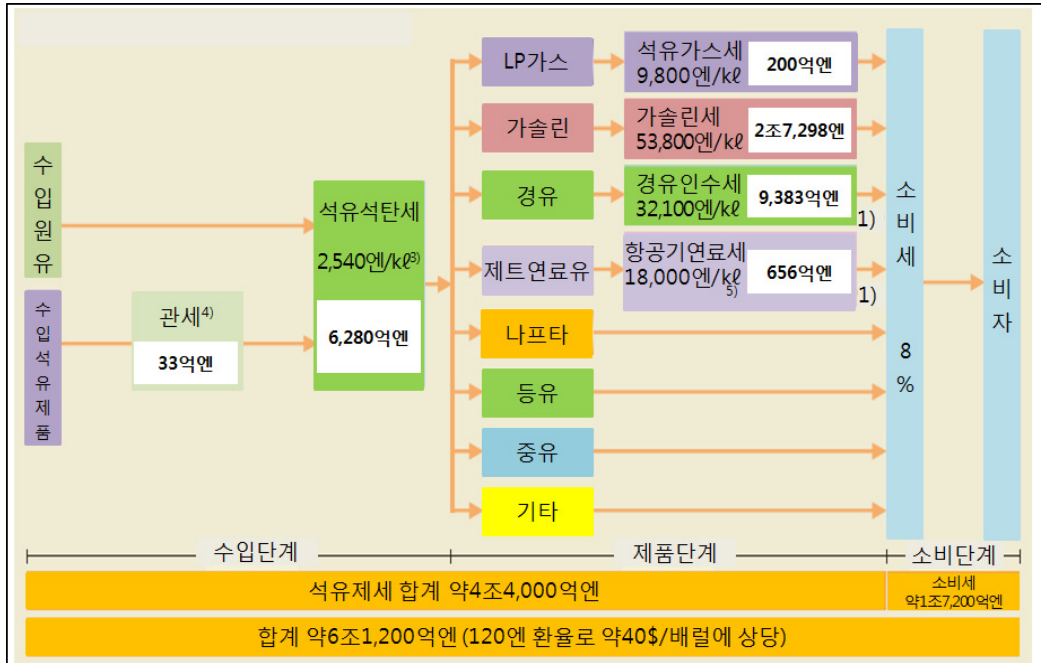
3) 국유자산 소재 시정촌 교부금에 관해서는 소요의 예산액을 확보할 것

4) 기업입지촉진에 관한 지방세의 불균등 과세에 따른 감소액에 관해서는 재정력지수에 관계없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을 반영할 것

5) 법인실효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시정촌세 감소액에 대해 보통교부세를 통해 전액재정조치 되도록 지방감소보전제도를 창설

참고로, 일본에서 석유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에는 수입단계에서 부과되는 관세(2006년 이후 제품수입에만 과세), 석탄석유세를 비롯해, 제품단계에서 부과되는 가솔린세(휘발유세 및 지방도로세), 경유인수세, 석유가스세, 항공기연료세의 개별간접세가 있다. 이들 석유제세의 수입은 2015년도 예산으로 4조 4000억엔이라는 거액에 달하고, 더욱이, 소비세까지 포함하면 총액은 6조 1200억엔에 이른다. 이를 동년도 석유소비량 1배럴당으로 환산하면, 약 40달러/배럴(1달러=120엔)에 상당한다.

[그림 4] 일본 석유관련 과세흐름(2015년 예산)



자료) 일본석유연맹 (2015) 「今日の石油産業 2015」

주1) 경유인수세와 항공기연료세에 'Tax on Tax'는 없음.

2) 석유석탄세는 원유, 수입석유제품, 석탄, LNG, LPG가 과세대상

3)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른 상승분 경과조치로, 2014년 4월1일에 2,290엔/kl에서 2,540엔/kl로 인상됨

4) 2006년 4월부터 원유관세(170엔/kl)는 철폐되고, 석유제품관세만 과세(본 그림의 관세수입은 2012년 실적에 근거한 석유연맹의 시산치)

5) 항공기연료세는 조세특례조치법에 근거하여 26,000엔/kl에서 18,000엔/kl으로 인하(3년 연장되어 2017년3월31일까지)

6) 사사오입 하여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양한 세목 중 경유인수세만이 지방세에 해당하는데 경유인수세란 가솔린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방도로정비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세이다(1956년 창설). 경유인수세도 가솔린세와 동일하게, 도로정비 5개년계획이 개정될 때마다 증세되어, 현재는 기본세율(1만5천엔/kl)을 크게 상회하는 잠정세율 3만2100엔/kl을 부과하고 있다. 과세대상은 디젤자동차 연료인 경유로, 농림·수사용, 선박용, 철도용 등의 경우에는 면세대상이다. 납세의 무자는 특약업자 또는 원매업자로부터의 최종인수자이다(1989년부터).

[표 11] 한일 지방세체계 비교(2010년 기준)

한국			일본		
도 세 (100) 14.0 조원	보 통 세 (76.6)	지방소비세(11.1) 취득세(28.6) 등록세(29.7) 면허세(0.2) 레저세(5.6)	도부현민세(40.2) 사업세(14.6) 지방소비세(191.3) 부동산취득세(2.8) 자동차취득세(1.4) 도부현 담배소비세(1.9) 골프장이용세(0.4) 자동차세(12.6) 광구세(0.0) 고정자산세(특례) (0.1) 경유인수세(6.5) 법정의 보통세(0.3)	보 통 세 (100)	도 부 현 세 (100) 12.9 조엔
	목 적 세 (22.4)	공동시설세* (2.4) 지역개발세* (0.6) 지방교육세(19.4)	입렵세(0.0) 법정의 목적세(0.0)	목 적 세 (0.0)	
시 군 세 (100) 12.7 조원	보 통 세 (90.6)	지방소득세(26.7) 주민세(3.5) 재산세(18.4) 자동차세(14.3) 담배소비세(12.7) 도축세(0.4) 주행세(14.7)	시정촌민세(41.7) 고정자산세(45.0) 특별토지보유세(0.0) 경자동차세 등(0.9) 시정촌 담배소비세(3.8) 광산세(0.0) 법정의 보통세(0.0)	보 통 세 (91.4)	시 정 촌 세 (100) 19.6 조엔
	목 적 세 (7.8)	도시계획세(7.8) 공동시설세(0.0) 지역개발세(0.0)	도시계획세(6.3) 입탕세(0.1) 사업소세(1.7)	목 적 세 (8.1)	

출처) 국중호 (2012) 「일본의 지방세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주 1) 2011년 한국의 지방세제도 개편에 따라 통폐합된 세목 있음(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 도축세 폐지)

2) 괄호 안은 각 세목의 비중

2) 국내사례 : 기타 신세원 논의사례⁶⁾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에 대한 과세로 정종필(2015)는 석유저장/처리시설 외에 폐기물 처리 시설, 시멘트 생산시설을 제안했고, 더불어 해저자원 중 해양심층수, 해저자원광물을 제안했다.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이 초래하는 외부비용에 대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주민건강조사를 들고 있는데, 다수의 연구에서 악취, 먼지, 유해물질로 인한 주민피해를 인정하고 있다.

(1) 외부불경제 유발시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은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시설 등으로 나누는데,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낭비 억제를 위해 재활용이 어렵거나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등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2014년도 현재, 살충제·유독물제품 용기, 부동액, 껌, 일회용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제품 등 6개 품목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으로 과세할 경우, 과세대상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중 소각 및 매립되는 폐기물로 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시도 내의 폐기물 최종처분장으로, 폐기물을 반입하여 소각하거나 매립하고자 하는 배출사업자이다. 납세지는 폐기물이 소각·매립되는 최종처분장의 소재지이다. 과세목적은 폐기물의 매립억제 및 재활용 촉진이므로, 원칙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의 최소비용을 초과하도록 과세표준과 세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정종필(2015a)은 10,000원/톤을 세율로 제안하였다.

예상되는 과세쟁점으로는 이중과세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미 폐기물부담금, 처리수수료 등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처리수수료는 폐기물의 직접처리 소요비용 충당을 위해 징수하는 수수료이므로, 지역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시설로 야기되는 외부불경제의 내부화 교정과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EU 회원국들도 별

6) 정종필(2015a) 발췌

도로 매립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과세 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멘트생산시설에 대한 과세도 제안되었다. 시멘트산업은 생산과정에 있어서는 에너지 다 소비산업일 뿐 아니라 생산·수송 과정에서도 주변지역에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산업이다.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과세대상은 시멘트 생산시설을 이용해 생산되는 시멘트가 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시멘트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시멘트를 생산하는 사업자로 한다. 납세지는 시멘트 생산공장 소재지이며, 생산되는 시멘트의 중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은 1,000원/톤으로 제안하였다.

예상되는 쟁점은 역시 이중과세 문제이다. 석회석이 이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지하 자원)에 과세대상인데, 석회석을 주원료로 하는 시멘트에 동일세목을 과세하는 것에 대한 이 쟁점은 피하기 힘들 것이다. 이에 대해 정종필(2015a)은 석회석과 시멘트에 대한 과세목적과 근거가 다르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 해저자원

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이하의 바다에 존재하면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서, 제24조 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물 자체를 이용하여 수산업, 농업에서 활용하거나 추출물질을 이용하여 식품, 의료, 미용 등에 활용한다. 우리나라 해양심층수의 대부분이 동해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 부존량은 거의 무한하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현재 취수해역은 강원 6곳, 경북 3곳이 지정되어 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해서는 상기 법률에 의거하여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해양심층수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세원으로 할 경우, 과세대상은 시도내 지정된 취수해역 안에서 취수된 먹는 해양심층수 및 상업용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해양심층수로 하며, 납세의무자는 개발업자, 납세지는 실제 취수하고 있는 취수해역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 과세표준은 취수량으로 세율은 먹는 해양심층수 취수량과 기타 목적 해양심층수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상되는 쟁점은 과세권의 귀속문제와 유사자원과의 과세형평성 문제, 이중과세 문제, 신생 산업에 대한 과세로 인한 산업경쟁력 저하 및 시장위축 문제 등이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에서는 해저광물을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저광물자원의 채취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조광료를 부과하고, 생산한 원유 또는 천연가스 판매가액에 매분기별 1일 평균생산량을 기준으로 부과요율을 적용하여 조광료를 산정한다. 여기에 「공유수면관리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부과·징수한다.

해저광물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세원으로 할 경우, 동 세의 세원인 지하자원과 차이가 그다지 없기 때문에 과세요건은 지하자원과 동일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되었다. 즉, 과세대상은 시도내 해저광구에서 채광된 해저광물로, 납세의무자는 해저광물을 채광하는 자, 납세지는 해저광구 관할 소재지/최초 반입지 소재지로 한다. 과세표준은 채광된 해저광물의 가액으로, 세율은 가액의 1천분의 5로 제안하였다.

예상 과세쟁점은 해저광업권의 귀속 및 이에 따른 과세권 문제, 납세지에 대한 이권 조율 등을 제시하였다.

3) 시사점

가장 큰 특징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변지역 지원금과 달리 시정촌(기초)-현(광역)-국가의 3단계 절차를 갖고 있는 관계로 절차간소화를 요구하는 점이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지시군(기초)-국가의 2단계 절차를 갖고 있어 지원금 사용이 도(道)의 통제 밖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향후 도입될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금은 3단계 절차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변지역 지원제도(예. 발전소 주변지역)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관련 언급은 전무한 상황이고 일본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전국시장회에서 석유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장시설에 대한 노후화대책과 안전확보대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석유사업자를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과 석유콤비나트의 국제경쟁력 강화 시스템 충실에 대한 언급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석유화학단지도 가동한지 30~40여

년 이상이 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설비교체 및 보수주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의 잠재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단지와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도 석유화학단지로부터의 일방적 지원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지역안전대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마련이 있다면 지역내 파트너십 구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기타 세원발굴 논의에서 「지방세법」 제141조(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목적)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과세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있다. 즉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은 지역의 세원발굴 의지가 지역자원시설세 세수확보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세목으로 지역의 과세자주권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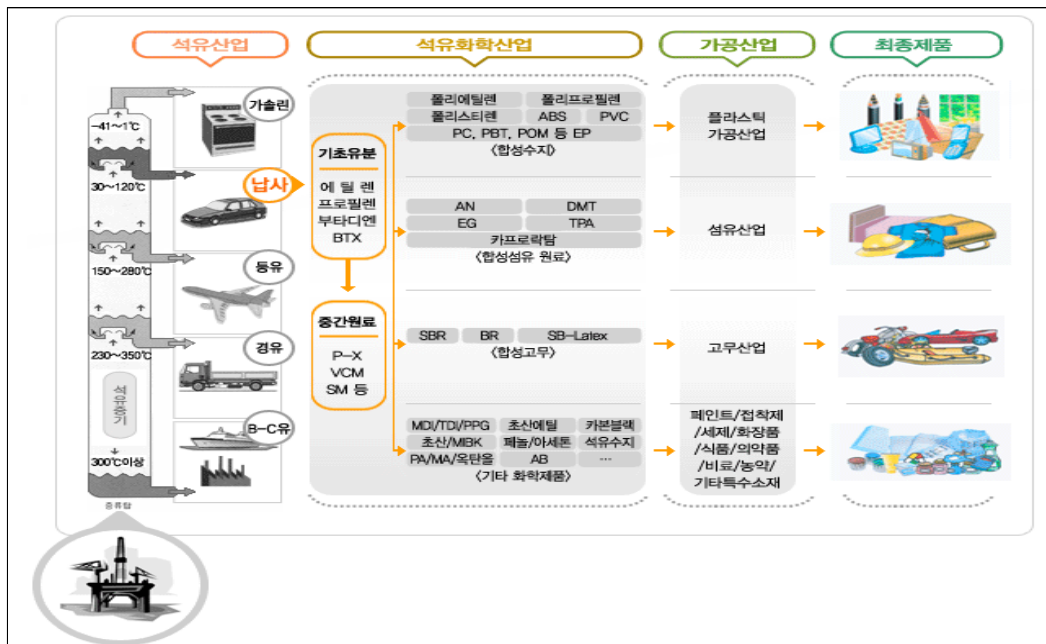
단,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에 대한 과세의 경우, 외부불경제가 도내 전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시설소재 시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수배분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이중과세의 문제, 조세저항, 과세권 귀속지 문제, 납세지에 대한 이견 조율 등의 과제 쟁점에 대해 충분한 논거 마련이 요구될 것이다.

제3장 충남도내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 대한 과세방안

1.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산업개요 및 납세현황

1) 산업개요

(그림 5) 석유화학산업의 개요



자료) 한국석유화학협회 (www.kpia.or.kr)

[그림 5]에서 설명하듯, 석유화학산업이란 석유제품(납사 등)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합성수지(플라스틱), 합성섬유(폴리에스터, 나일론) 원료, 합성고무 및 각종 기초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는 기초유분 생산 비중이 제일 높고, 다운스트림(고무, 플라스틱) 및 신소재산업(화장품, 자동차 등)의 관련기업이 집적해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1988년부터 서산시 독곶리, 대죽리 일원에 민간기업 주도하에 조성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중반이후 대규모 설비증설과 함께 대중국 수출 급성장으로 성장이 가속화되어 현재는 70여개 1만5천여명이 종사하는 우리나라 대표의 석유화학단지로 자리매김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대산5사의 연간매출액은 2014년도 기준 41조 259억원으로 국가경제에 기여도도 높다.

[그림 6] 대산석유화학단지 개요



자료) 한국석유화학협회(www.kpia.or.kr)을 수정

- 7) 울산과 여수의 경우는 '석유화학공업 육성법'에 의거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어 개발. 국가산단의 경우,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하여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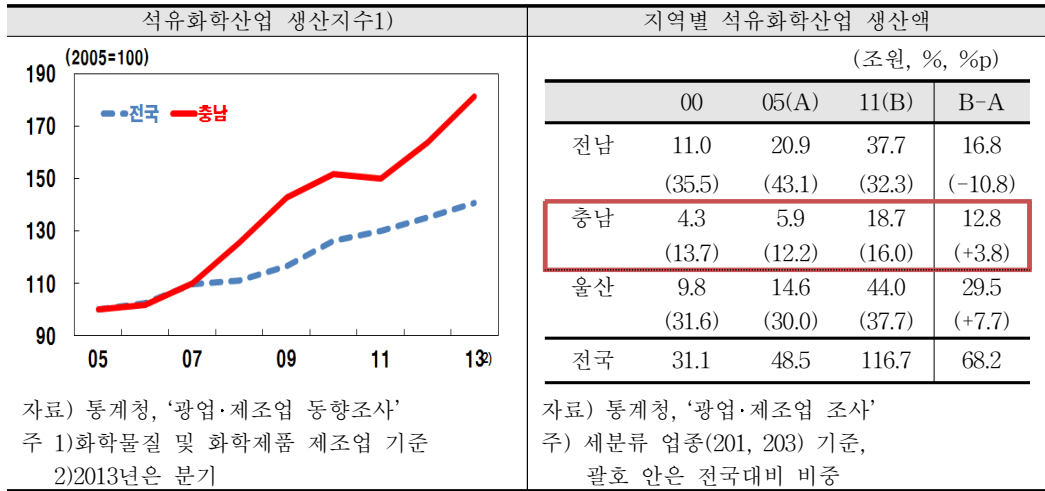
[표 12] 서산지역 주요 석유화학업체 현황

업 체 명	준공년도	주요생산품 및 생산능력	향후 설비증설계획	연매출액
삼성토탈	1991	기초유분(274), 중간원료(164), 최종제품(131)	PX 100만톤 (2014년 완공 예정)	8조7914억원 (한화토탈, 2014년)
삼성 석유화학	2000	최종제품(70)	-	-
LG화학	2003	기초유분(292), 중간원료(38), 최종제품(141), 기타(15)	톨루엔 등 22.6만톤 (2013.10 완공예정)	6조 (2013년)
롯데 케미칼	2003	기초유분(397), 중간원료(50), 최종제품(156)	자일렌, 납사 각 100만톤 (현대오일뱅크 합작, 2016 하반기 완공 예정)	7조 (2013년)
대산MMA	2006	중간원료(20)	-	1공장: 1377억원 2공장: 1299억원
현대 오일뱅크	1988	석유류 정제	-	22조2994억원
현대코스모	2009	기초유분(벤젠, 24), 중간원료(118)	-	-

자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2013)에 가필

역내 제조업 출하 중 비중을 보면 2005년 8.0%에서 2011년 9.9%으로 전자제품에 이어 지역 2위산업으로 부상했고, 2011년도 생산액 기준으로 울산(44.0조원) 전남(37.7조원)에 이어 국내 3위(18.7조원)을 점한다. 특히 에틸렌 생산능력은 2013년도 기준으로 국내 최대산지인 여수의 80% 수준까지 성장했다. 또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대형업체의 대규모 설비증설이 다수 진행 중이어서 이러한 생산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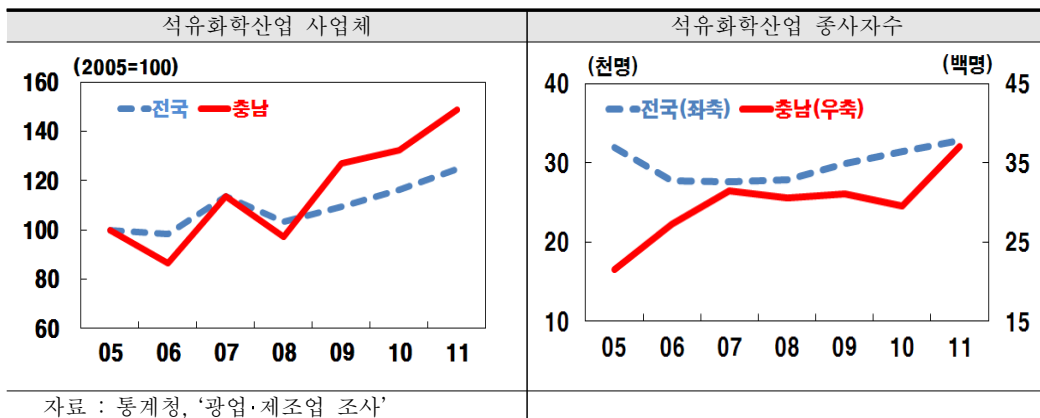
[표 13] 충남 석유화학산업의 생산추이



자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2013).

생산 면에서 대산 5사 등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연평균 생산증가율이 8.4%로 전국평균의 2배에 달하고(표 13 참조), 2005년~2011년도의 고용을 보면 사업체수 48.6% 증가, 종사자수 72.8% 증가수치를 보여, 명실공히 충남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산업임을 알 수 있다(표 14 참조). 수출은 2012년도 기준 60억 달러로, 이는 2005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이다.

[표 14] 충남 석유화학산업 고용 추이



출처) 전계 한국은행 (2013).

2) 납세현황

대산 5사 중 하나인 현대오일뱅크의 에너지 정제 및 저장시설에서 취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세 및 부담금을 과세하고 있다. [표 15]를 통해 현대오일뱅크가 대산5사 국세납부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도에는 국세 납부액이 감소했는데 이는 세계 유화경기 침체로 인한 법인소득 감소에 기인한다.

[표 15] 대산5사 국세납부현황

(단위: 억원)

구분 년도별	계	현대오일 뱅크	삼성토탈	엘지화학	롯데 케미칼	케이씨씨
계	169,924	157,902	6,077	2,170	2,580	1,195
2013	36,833	34,936	874	334	366	323
2012	37,748	34,650	1,550	556	607	385
2011	36,160	33,337	1,191	672	612	348
2010	32,110	28,834	1,909	541	761	65
2009	27,073	26,145	553	67	234	74

자료) 서산시 내부자료

총 국세 납부액의 세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79.58%)와 교육세(12.33%)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현대오일뱅크의 국세가 대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83.90%)와 교육세(12.91%)로 구성된 것에 기인한다. 현대오일뱅크는 유류 가공/판매업체로 제품 판매시 유가의 특성상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관계로, 기타 4사의 제품과 비교하여 국세 납부 규모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

[표 16] 대산5사 세목별 국세 납부현황 (2013년도) (단위: 억원)

세목별 구분	계	현대오일 뱅크	삼성토탈	엘지화학	롯데 케미칼	케이씨씨
합 계	36,833	34,936	874	334	366	323
교 통 세	29,310	29,310	-	-	-	-
개별소비세	984	779	189	4	12	-
법 인 세	1,607	274	552	268	327	186
원천소득세	169	8	73	60	24	4
교 육 세	4,543	4,510	29	1	3	-
기 타	220	55	31	1	-	133

자료) 서산시 내부자료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대산 5사가 납부하는 내국세는 2013년도 기준 국세대비 0.77%에 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7]은 지방세 납부현황, [표 18]은 지방세 세목별 납부현황을 나타낸다.

〔표 17〕 대산5사 지방세 납부현황

구분 년도별	계	현대오일 뱅크	삼성토탈	엘지화학	롯데 케미칼	KCC
계	1,486	264	526	331	264	101
2013	283	58	92	65	39	29
2012	404	67	146	68	93	30
2011	396	92	123	79	83	19
2010	279	32	134	62	37	14
2009	124	15	31	57	12	9

자료) 서산시 내부자료

〔표 18〕 대산5사 세목별 지방세 납부현황 (2013년도) (단위 : 억원)

구분 세목별		계	현대오일 뱅크	삼성토탈	엘지화학	롯데 케미칼	KCC
합 계		283	58	92	65	39	29
도 세	소 계	67	17	18	22	7	3
	취 득 세	54	13	15	20	5	1
	지방교육세	6	1	2	1	1	1
	기타	7	3	1	1	1	1
시 세	소 계	216	41	74	43	32	26
	재 산 세	31	8	9	5	4	5
	지방소득세	179	31	64	37	27	20
	기타	6	2	1	1	1	1

자료) 서산시 내부자료

2. 대산석유화학단지⁸⁾에 대한 과세 및 지원)

대표적인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인 에너지 생산·정제시설이 입지하여 주변지역에 크고 작은 피해를 끼쳐왔고 향후의 잠재적 위험도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대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해온 불편과 불이익은 상당한데 반해, 기업들의 시설자동화로 인해 인구유입효과, 지역출신 인력고용률, 지역경제 기여도 등은 높지 않다.

대산석유화학단지내 기업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막대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면서도 개별공단이라는 이유로 SOC가 부족하여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기업경쟁력 약화,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그나마 울산과 여수의 석유화학단지는 국가산단에 해당하는 관계로 SOC 조성, 완충녹지사업 등과 같은 지원이 국가로부터 제공되나 대산의 경우는 개별산단에 해당하여 이런 지원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해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에 대한 과세방안을 생각해보고, 동시에, 비슷한 논거를 갖고 기시행중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같은 지원제도 창설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1)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발전, 수질개선, 수자원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세이자 목적세이다.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특정자원분은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에 과세하고 있고, 특정부동산분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특히 충남도의 경우, 2014년부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시작하여 약 165억원의 세수를 올렸고, 2015년부터는 세율인상(1kWh당 0.15원→0.3원)으로 약 360억원

8) 정종필(2015b) 참고

의 세수를 갖게 되었다. 세수액으로는 크지 않으나 과세자주권 확보의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하면 지방세목 중 유일한 목적세로,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특수한 부존자원이나 지자체의 고유한 세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일정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세목이다. 세수가 작아 일반재원에 통합되어 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충청도의 경우, 화력발전으로 인한 지역자원시설세 증액을 계기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에너지 관련산업 육성과 지역에너지 활용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조례를 설치하고⁹⁾ 운영 중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보에 가장 적합한 세목이라는 의미에서 세수 확충방안, 나아가 신세원 발굴에 대한 연구 등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어 왔다(정종필, 2014; 이민정, 2014a)

전술(前述)의 내용과 같이, 지역에 소재하면서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대표시설로 에너지 생산 및 정제시설이 있다. 기타, 발전소, 매립장, 송전탑, 화장장 등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외부불경제의 내부화를 위해 교정과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에너지 정제 및 저장시설에서 취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세 및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표 19]와 같다. 내국세로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지방세로는 자동차세 주행분을 과세한다. 부담금으로는 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 안전부담금, 품질검사수수료 등을 부과한다.

9)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2015년 7월 30일 제정. 조례 제 4012호)
동 조례의 제 4조(세출)에서 지하수, 지하자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처를 정하고 있다.

[표 19] 에너지세제 부과 현황

구분		휘발유 (원/ℓ)	경유 (원/ℓ)	등유 (원/ℓ)	중유 (원/ℓ)	LPG (원/kg)		LNG (원/kg)	관련법
						부탄	프로판		
관세		3%				0%		2%	관세법
수입부과금		16				원유 16(원/ℓ)		24.242	석대법
내국세	개소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529	375	63	17	275	20 (14) ¹⁾	60 (42) ²⁾	개소세법/ 교통세법
	교육세	79.35	56.25	9.45	2.55	41.25	-	-	교육세법 (개소세의 15%)
	주행세	137.54	97.5	-	-	-	-	-	지방세법 (개소세의 26%)
	계	745.89	528.75	72.45	19.55	316.25	20 (14)	42	
	부가 가치세	10%							부가세법
지방세	주행분 자동차 세	138	98	-	-	-	-	-	
판매부과금		36(고급)	-	-	-	62.28	-	-	석대법
기타 ³⁾		품질검사(0.47)				품질검사(0.03) 안전부담(4.5)		안전부담 (3.9원/㎡)	

자료) GS칼텍스 에너지업무팀(2015)

주 1) 프로판 : 가정/상업용만

2) LNG : 발전용 이외의 용도만 적용

3) 기타 : 전기(전력산업기반기금), 휘/등/경/중/LPG(품질검사수수료),
LPG/LNG(안전관리부담금)

석유류에 대한 조세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국세(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로 2013년도에만 21조 5,992억원, 지방세로 2013년도에 3조 4,356억원의 세수입을 조달했다. 국세 대비 지방세의 규모는 약 15.9% 수준에 머무르는데, 그나마 지방세인 주행분 자동차세에서 운수업자 유류세 보조금을 제하면 순수 자치단체분은 국세대비 4%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처럼 외부불경제 유발물질인 석유류에 대해 이를 내부화할 다양한 조정과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지자체에 돌아오는 세수는 극히 일부임을 알 수 있다.

정종필(2014)은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과세대상, 납세자, 과세표준, 세율 등을 제안하였다.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이 취급하는 에너지원이 될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에너지 지원을 취급하는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사업자가 되어야 할 것을 제안했다.

흥미로운 점은,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행위도 국내 에너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와 상업적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상업적 목적의 에너지 저장시설에 대한 과세에서도 국내에서 생산된 천연가스 및 석유류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이미 생산단계에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반면 국외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천연가스 및 석유류를 저장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납세지는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의 소재지로, 천연가스시설의 경우에는 인천, 경기도 평택, 경남 통영, 강원도 삼척이 될 것이고, 석유정제시설은 울산, 전남 여수, 충남 서산 등이 될 것이다.

과세표준은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서 취급하는 에너지원의 단위당 취급량(판매량,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단, 기존의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단위는 에너지원별로 상이한데 석유류는 ℓ, LPG는 kg, LNG는 m³를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세목 및 부담금과의 통일성 및 효율적인 세원 관리를 위하여 각 에너지원별로 기존의 과세단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율은 천연가스 및 석유 등의 에너지원 등의 에너지원이 야기하는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세율을 찾아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 방안으로 유사한 논거로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고 있는 발전소(화력, 원자력)에 대한 세율을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¹⁰⁾. 참고로, 원자력발전의 단위당 세액인 1원은 휘발유에 대한 세액대비 0.1%, 중유에 대한 세액 대비 1% 수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자력발전의 단위당 세액인 1원(천연가스 취급량 1m³당 1원, 원유 및 석유류 1ℓ 당 1원)을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이 취급하는 에너지원에 대하여 적용하더라도 에너지가격상승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했다(표 20 참조).

[표 20]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구 분	내 용
과세대상	천연가스, 원유 및 석유류제품
납세의무자	시·도 내의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사업자
납세지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의 소재지
과세표준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 보관된 에너지원의 취급량(생산량, 반입량)
세율	천연가스 취급량(생산량, 반입량) 1m ³ 당 1원 원유 및 석유제품류 취급량(생산량, 반입량) 1ℓ 당 1원

자료) 정종필(2014)

충남(서산, 보령)에 입지한 위험시설물(석유정제시설, LNG)에서 처리하는 천연가스와 석유류 제품의 연간처리량은 2013년도 기준 2천838만6천m³로¹¹⁾, 이를 상기 세율을 적용하면 충남은 약 261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¹²⁾. 전국적으로는 2,074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3년도 기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세수인 914억원의 2.3배에

10)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중에서 천연가스 제조·공급시설에 대하여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방안으로 박남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2013.1.10.)이 있다. 박남춘 의원안에서는 천연가스 인수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천연가스 생산량 1m³당 1원을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1) 한국석유공사(2014) 「비축기지운영현황」, 한국가스공사(2014) 「공급시설현황」

12) 참고로, 울산 844억원, 전남 487억원

해당하고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특정부동산분) 세수 9,390억원의 22.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충남이 2014년부터 과세하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60억의 76%에 달하는 규모이다. “대산단지가 납부하는 국세의 10% 환원”을 요구하는 서산시의 요구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목적세로서 사용처 및 활용방향을 정립하여 사용해간다면 지역에 있어 소중한 재원임에는 틀림없다.

2)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

주변지역에 야기하는 외부불경제의 내부화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또하나의 방안으로 주변지역 지원을 들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일부시설(예. 발전소 주변지역 등)에 대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현재 주변지역 지원제도가 시행중인 시설로는 발전소, 송변전설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댐 등이 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도 특별지원이 시행중이다.

이들 시설을 기준으로 2~5km 이내 지역에 주민복지,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을 시행하는데, 지원금 산정은 해당시설의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발전량, 변전용량, 폐기물량 등을 이용하고 있다. 지원금의 재원은 원인제공자(사업자, 배출자)가 부담하거나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에서 충당한다.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경우, 지원목적이 해당지역의 관련시설 개발촉진과 시설의 원활한 운영도모, 주민의 수용성 제고에 있다. 즉, 지원지역에 대한 보상금이 아닌 더 많은 유사시설을 입지하기 위한 보조금인 것이다. 더불어 불투명한 사업 결정과정, 타당성 검증 부실, 회계투명성 확보장치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기도 하다¹³⁾.

충남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에서 석유저장·정제시설 주변지역 지원제도(안) 도입이 예상되는 논쟁점 등을 살펴보자.

충남에 입지한 4개시군(보령, 태안, 당진, 서천)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매년

13)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의 미흡, 주민지원사업 결정과정 불투명, 주민지원 성격에 맞지않는 사업 빈발, 사업비 집행과정의 회계투명성 확보장치 미비, 사업추진 세부과정의 외부 비공개 등을 들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전량¹⁴⁾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다. 앞의 [표 7]에서 언급하였듯이, 매년 총 275억원 가까운 금액을 지원받고 이를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기타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표 21 참조).

[표 2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종류

사업종류		대상	시행주체 ^{주1)}	법령근거
기본 지원 사업	소득증대사업	'주변지역'	지자체장	발주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육영사업		발전사업자	
	전기요금보조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주변지역'이 속한 지자체 관할지역	지자체장	발주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원자력 대국민 홍보사업		일반국민	법인 (원자력문화재단)	발주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기타 지원 사업	지원사업 관리·연구·평가 및 홍보사업	발전소 소재지역 ^{주2)}	지자체장	발주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원전주변 환경 및 방사선 안전 감시기구 설치·운영 지원사업			
	화력발전소 주변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	'주변지역'		
	기타사업		발전사업자	

자료) 이민정(2014b)

주 1) 지자체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가능

2) 기장군(고리), 울주군(신고리), 경주시(월성), 울진군(한울), 영광군(한빛)

14) 지원금 산출근거 = 발전량(전전년도 평균이용률) * 지원단가

유연탄 : 발전량 * 0.15원/kWh

무연탄 : 발전량 * 0.3원/k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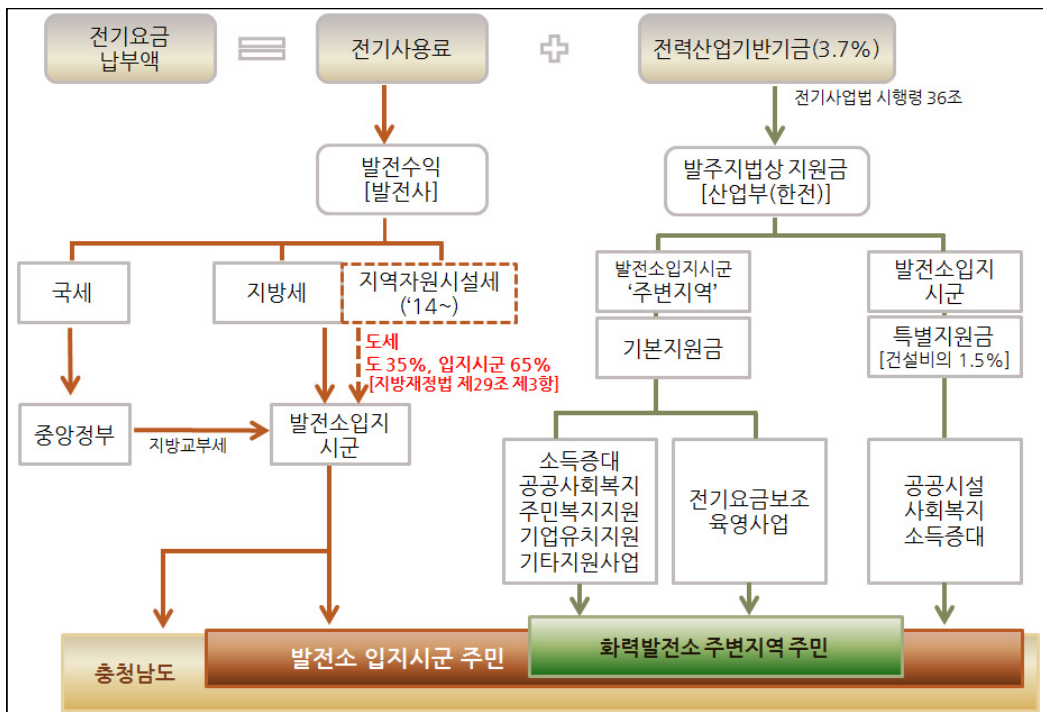
[표 22] 기본지원사업의 내용

사업종류	세부내용	조건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 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사업 -사업시행자는 운영규칙 마련
공공·사회복지사업	<p><공공시설>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향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오락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p> <p><사회복지>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시설 확충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p>	<p><공공시설> -사업시행 이후 지자체가 소유가능한 사업 위주 -정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가능한 사업 지양</p> <p><사회복지> -지자체장은 운영규칙 마련 가능 -건립시설은 지자체 소유</p>
주민복지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융자사업	<p><융자사업> - 해당지역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실시 - 관내에 소재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융자금 대여약정 체결·운영 가능 - 조례로 기준 정함</p>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의 유치 및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p>- 기업의 유치·설립·운영에 필요한 융자사업·임대사업·보조사업 - 조례로 기준 정함</p>
육영사업	교육기자체 및 통학·숙식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관련 시설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p>- 사업시행자가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5~30% 범위 내에서 결정 (지원금 연간총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는 지역특성에 따라 달리 결정가능) - 우선지원가능 대상: 발전소 건설로 인한 이주자 자녀, 학교장 추천의 결식아동·소년소녀가장·생활보호대상자 자녀 - 동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지역은 일정금액을 장학금으로 적립가능</p>
전기요금보조사업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 체결된 주택용 전력(아파트 종합계약 및 단일계약에 의한 주택용 아파트 고객과 1주택 수가구 고객 포함) 및 산업용 전력고객	<p>-시행대상: 원전 또는 연간 총기본지원사업비의 20억원 이상인 발전소 -지원한도: 기본지원사업비의 20%이내 - 주택용 전력의 호당, 산업용 전력 수급계약단위별 지원한도는 별도로 정함</p>
그 밖의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협조제고에 필요한 사업	- 지역문화진흥사업, 지역홍보(지역이미지 제고) 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3)

기본지원사업은 [표 22]와 같이 주변지역의 민원해결, 소득증대, 복지제고, 전기요금 보조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건축·증축시 지원되어 입지시군을 위해 활용될 수 있어 체육관, 문화회관 등의 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기타지원사업에는 주변환경 보전 및 감시 지원사업도 마련되어 있어 주민건강검진, 환경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지원사업과 지역자원시설세의 흐름 및 수혜범위는 [그림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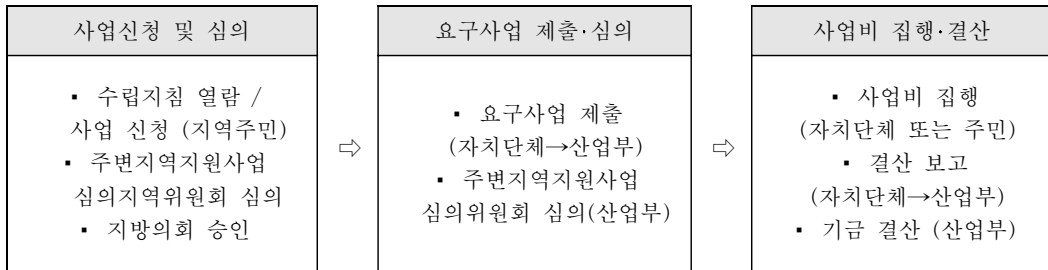
[그림 7] 화력발전소 관련 지방세 및 주변지역 지원금 흐름도



자료) 이민정(2014b)

지원사업은 발전소 입지시군의 '심의지역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위원회'의 2단계 체제에서 사업선정, 심의, 집행 및 결산이 이루어진다(표 23 참조). 단, 사업선정 등 과정에 도(道)의 개입여지가 없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이민정, 2014b)

[표 23] 주변지역 지원사업 흐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3)

사업선정 시 우선순위에서 전술(前述)한 주변지역 지원금의 목적이 명확해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전원설비 건설입지 확보와 연계된 사업
- ②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이주자 및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 ③ 소득증대 및 고용증진효과 기대사업
- ④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성 숙원사업
- ⑤ 인재육성사업

[표 24]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관련조례(당진시)

조례명	주요내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①소득증대사업 및 ②공공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 -①은 관련어촌계/ 부락단위 공동명의, ②는 시장명의 취득이 원칙 -지원사업시설물 관리위해 기금조성 의무 (재원: 지원사업 및 시설물의 일정수익금)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용자금운영 기준 대상: ①주민복지지원사업, ②기업유치지원사업 용자한도: ①500만원/명, ②2천만원/기업 (둘다 연3%, 2년거치 3년분할상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목적, 세입세출 내용, 준용규정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더불어, 발전소 입지시군은 관련조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예상쟁점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 대하여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방안과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 방안의 2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다루고, 각 방안의 도입요건과 적용시 체제, 유사제도 분석 등을 통해, 각 방안들이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도입될 경우를 예상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다.

전술한 두 가지 방안은 도입과정 및 도입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제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조세저항에 관한 문제이다. 이미 LNG 및 석유류에 대하여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경우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전술(前述)의 내용에서 제안한 대로, LNG에 대해 1m³당 1원, 석유류에 대해 1ℓ 당 1원을 과세할 경우 기존 세액 대비 1% 수준으로 실질적 조세 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이미 다양하고 많은 조세가 부과되고 있어 심리적 조세저항은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이 취급하는 LNG 및 석유류에 대하여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할 때에는 기존 관련 세목들을 조정하면서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즉, 현재 과세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휘발유, 경유)나 개별소비세(LNG, 등유, 중유)를 조정하여,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추가 과세로 인한 실질적, 심리적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중과세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첫 번째 쟁점과도 연결되는 사항으로, 목적세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의 목적을 환경적 측면에 둔다면, 이미 석유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과세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목적이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 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에 요하는 재원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경보호·개선 사업의 필요재원 확보와 겹치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단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원래 2015년말 일몰될 예정에서 2018년 말까지 존치로 개정되어(2015년 12월 2일 국회본회의 통과), 2019년부터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논한다면 이중과세 문제는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과세 형평성에 관한 문제이다. 지역에서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시설은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위험시설물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정제·저장 시설에 대해서만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지역에 입지한 석유화학공단이나 위험물질 취급공장 등에서 유출된 유독가스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들이 뉴스를 통해 왕왕 보도되고 있다¹⁵⁾.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이 취급하는 천연가스 및 석유류에만 한정하지 않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위험물로 확대한다면 과세 형평성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단, 위험물 취급사업자 가운데는 영세규모의 사업소가 많다. 그러므로 도입 초기에는 과세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시설물로 한정하고 이후 과세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2011년 8월 울산석유화학단지 폭발사고, 2013년 3월 여수석유화학단지 폭발사고, 2014년 5월, 2015년 7월 울산석유화학단지 폭발사고 및 질식사고 등

제4장 결론 및 제언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의 관리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지역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 시설은 관리시 지역에 기반할 때, 외부불경제 유발시설 관련 정보수집, 정책수립 및 집행·관리·감독 등을 지방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문제발생시의 신속한 대응도 가능하다. 따라서 앞에서 논한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지역에 소재한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에 대한 과세는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의 하나인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지난 30여년간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왔고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경제에 대한 낮은 파급력으로 지역경제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게다가 단지 주변의 주민들은 대기·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은 물론 교통사고, 잠재적 대형 사고 등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개별산단인 관계로 국가적 대처와 해결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유사 위험시설인 발전소 주변지역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매년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고 있으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산단지에서 1년간 납부하는 국세는 4조4천억원에 달하지만 지방세 납부액은 이의 1%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국가경제를 위해 지역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모습은 씁쓸할 따름이다. 특히 충남의 경우, 당시의 지역개발 논리와 수도권에 인접한 입지적

조건 등에 의해 전력공급기지, 산업의 중추기지라는, 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시설입지 지역민들의 피해감수라는 그림자가 있어왔기에, 대산단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논의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대산단지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종합적 개선을 위해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지원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화력발전의 경우, 2014년부터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원으로 포함되어 세수를 올리고 있다. 큰 세수액은 아니지만 과세자주권 확보라는 측면과 기피시설의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고 환경보전, 지역개발의 목적으로 시설입지 시군은 물론 도(道) 차원에서도 목적세에 부합하는 사업을 도모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 대하여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방안과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 방안의 2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다루고, 각 방안의 도입요건과 적용시 체제, 유사제도 분석 등을 통해, 각 방안들이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도입될 경우를 예상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다.

먼저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을 검토하였다.

정종필(2015b)은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이 취급하는 에너지원이 될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취급하는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사업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단,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경우 다음 3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조세저항에 관한 문제이다. 이미 LNG 및 석유류에 대하여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경우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둘째, 이중과세에 관한 문제이다. 목적세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의 목적을 환경적 측면에 둔다면, 이미 석유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과세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단, 교통·에너지·환경세가 2018년 말까지 존치하기로 개정되어 2019년부터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는 것으로 논한다면 이중과세 문제는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과세 형평성에 관한 문제이다. 지역에서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시설은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위험시설물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정제·저장 시설에 대해서만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과세대상을 천연가스 및 석유류에만 한정하지 않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위험물로 확대한다면 과세 형평성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단, 위험물 취급사업자 가운데는 영세규모의 사업소가 많으므로 도입 초기에는 과세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시설물로 한정하고 이후 과세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로 검토한 방안은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도입이다.

주변지역에 야기하는 외부불경제의 내부화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인 주변지역 지원은 현재 일부시설(예. 발전소, 송변전설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댐 등)에 대해 이미 시행되고 있다.

단,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경우, 지원목적이 해당지역의 관련시설 개발촉진과 시설의 원활한 운영도모, 주민의 수용성 제고에 있는 점, 즉, 지원지역에 대한 보상금이 아닌 더 많은 유사시설을 입지하기 위한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양날의 검과 같을 수 있다. 더불어 불투명한 사업 결정과정, 타당성 검증 부실, 회계투명성 확보장치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기도 하다.

세 번째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의 지침변경을 제안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석유류에 대한 각종 부담금(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과금 등)이 모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동 회계에 석유류의 조달재원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류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의 안전 등에 관련된 지출은 매우 저조하다. 기금의 절반이 공자기금예탁금, 타계정 전출금 등으로 지출되고 있다.

지침변경을 위해서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의 세출항목에 석유류 취급 시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물론, 법률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은 그리 녹록한 과정은 아닐 것이다.

네 번째로, 가장 가깝게는 조례제정을 통해 주변지역에 대한 서산시 자체의 노력과 지원에 대한 입장표명과 지원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상기의 쟁점 외에도 문제점은 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신세원으로 발골을 추진할 경우,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자체수가 적다는 것은 큰 약점이다. 화력발전소의 경우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시군, 환언하면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지자체가 많았던 관계로 지역주민,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의 결집력이 컸다. 하지만, 석유화학단지의 경우 관련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어 결집력이 작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지원을 ‘우리지역만을 위한 일’ ‘지역이기주의’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공론화 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전국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는 문제임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지원주체가 정부인지 입지기업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다.

더불어 도(道) 개입여지의 유무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도세이기 때 문에(도 35%, 입지시군 65%) 도가 세수활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운용사례를 보면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경우, 도(道)는 사업 선정에서 결산에 이르는 과정과 심의지역위원회 참여 등에 개입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주변지역 지원금의 사용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다. 일본의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 등 교부금의 운용사례를 참고하여,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3단계 절차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좀더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위해서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충남도 에너지 정제·시설 소재지역인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신세원발굴 연구를 지원함과 동시에 충남지역의 실정에 특화한 연구이다. 국내외 사례, 유사 지원제도 등을 아우르면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제안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시간제약상 현장조사가 부족하여 보다 생생한 의견들을 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10월 29일에 서산시와 충청투데이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관련시민, 공무원, 도의원, 지역주민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지만 1회에 그쳐 좀더 심도있는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무쪼록 동 연구가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인 대산석유화학단지 지원제도 마련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참 고 문 헌

- 김병빈(2004) 「대산공단 주변지역에서 악취로 인한 건강영향의 주민인식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복희(1993) 「대산임해공업지역 입지적 특성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노삼규 외(1993) 「석유화학단지의 위험성 평가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안전계획」 한국과학재단
- 라휘문(2014)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의 성과와 지방세입의 연계구조 설계: 대산임해 산업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제14권 제4호
- 백성욱(2012) 「대산지역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조사연구」 국립환경과학원
- 산업통상자원부 (2013) ‘2014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 수립지침안’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부설 환경계획연구소(1994) 「대산3사 주변 환경영향 조사 연구」 대산공단 공해방지대책협의회
- 송상훈, 류민정(2011) 「지역자원시설세의 발전적 과세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양태웅 외(2011) ‘서산 대산공단 악취실태 조사결과」 「보건환경연구원보」 제21권
- 오경섭(2011)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관한 연구: 여수산단기업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남훈 외(2010)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생태산업클러스터 구축방안: 대산임해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 연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요약집
- 이동구(2008) ‘대산석유화학단지 활성화방안」 「석유화학」 통권186호
- 이민정(2014a) 「지역자원시설세 활용을 위한 사례연구」 충남연구원
- (2014b)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회계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 이상훈, 김진하(2012)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조계근(2013)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방안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 정경삼(2010) 「여수산단 재해사고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석호 외(2014) ‘석유화학단지 개발에 따른 대산읍 토지이용과 취락경관의 변화’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4권4호
- 정종필(2014) 「지역특정자원에 대한 선택적 지방세 과세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5a) ‘신세원발굴을 통한 지방세 확충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네트워크포럼 제5차 세미나 발표자료
- (2015b)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
- 조강식 (2012) 「울산 석유화학단지 화재위험성 분석 및 소방대책」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소방방재청(2014) 「2013년도 위험물 통계자료」
-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2004) 「대산3사 영향권역 주민환경 역학조사」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2013) 「충남지역 석유화학산업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행정자치부 「2014 지방세통계연감」
- GS칼텍스 에너지업무팀(2015) ‘정유산업의 현황과 과제’
- 경향신문 2008.5.28 여수시, 국가산단주변지역 지원법 추진
- 한국일보 2010.1.17 국내3대 석유화학단지 손 잡았다
- 경향신문 2014.10.19 전남도, 여수 등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추진
- 연합뉴스 2015.4.3 서산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건의
- 석유화학협회(<http://www.kpia.or.kr>)
- 석유연보 (www.petroluem.or.kr)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부 록

①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등 교부금교부 규칙

(1978년 통상산업성 고시 제434호)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집행적정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거, 및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집행적정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집행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등 교부금교부규칙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기에 고시한다.

제 1조(통칙)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 제 50조 제2항에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집행적정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집행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는 외,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교부금 목적)

이 교부금은 석유저장시설주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용 시설로, 석유저장시설 설치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의 정비를 도모하고, 이로서 석유저장시설 설치의 원활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석유"는 원유, 휘발유, 제트연료유, 등유, 경유, 중유 및 액화석유가스 (탄소수 3 또는 4의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석유가스를 액화한 것을 말한다 . 이하 동일)을 말한다.

2. 이 규칙에서 "석유정제업자 등"은 석유비축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석유정제업자 등 및 석유저장업무만을 당해 석유정제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행하는 법인, 동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석유가스수입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업무만을 당해 석유가스 수입의 위탁을 받아 행하는 법인 및 경제산업대신 및 독립행정법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를 말한다.

3. 이 규칙에서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업자 등이 신설, 증설 또는 보유한 석유저장시설을 말한다.

4. 이 규칙에서 "시정촌 합병"은, 2 이상의 시정촌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정촌을 설치하거나, 또는 시정촌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정촌에 편입하여 시정촌 수의 감소를 수반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규칙에서 "대상 지역"은, 영 제50조 제2항에 규정하는 대상구역을 말한다.

6. 이 규칙에서 "공공용 시설"은 별표 상단에 있는 교부금에 따라 동표 하단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이 규칙에서 "직접교부사업"은, 대상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는 도도부현이 당해지역에서 행하는 공공용 시설의 정비사업을 말하며, "간접교부사업"은 대상지역에서 시정촌 그밖의 자가 행하는 공공용 시설의 정비사업에 대하여 당해대상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는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보조사업을 말한다.

제4조 경제산업대신은 1978년 4월 1일 이후에 석유저장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1978년 4월 1일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석유저장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포함하고, 공업재배치 촉진법을 폐지하는 법률 (2006년 법률 제32호)에 의한 폐지 전의 공업재배치촉진법 (1972년 법률 제 73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전촉진지역에서는 증설에 한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직접교부사업 또는 간접교부사업 (이하 "교부대상사업")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 당해 석유 저장 시설에 따른 대상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는 도도부현에 대하여 당해 교부 대상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금으로 교부한다.

2. 경제산업대신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금의 교부신청을 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1년전 회계년도 말일에 1 시정촌에 실제로 존재하는 석유저장시설 저장량의 합계량이 10만kl 이상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교부대상사업 (석유저장시설 설치가 그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정촌 구역 및 이에 인접하는 시정촌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용 시설의 정비사업에 관한 것에 한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석유저장시설에 관한 대상구역 (당해 석유저장시설 설치가 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정촌의 구역 및 이에 인접하는 시정촌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는 도도부현에 대하여 당해 교부대상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금으로 교부한다.

제 5조 (교부금 교부한도액)

교부금의 교부한도액은 다음 각호에서 내건 경우에 따라 당해각호에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전조 제1항에 정하는 교부금 : 1건당 40억엔을 한도로 석유저장시설 저장량의 합계량에 1 kl당 800엔을 곱해 얻은 금액
2. 전조 제2항에 정하는 교부금 : 매회계년도마다 석유저장시설 저장량의 합계량이 10만kl 이 상의 시정촌당 석유저장시설 저장량의 합계량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해 얻은 금액

석유저장시설 저장량 합계량 (단위 : kl)	산식
10만 이상 ~ 100만 미만	$A = 0.495V + 11.55$
100만이상 ~ 200만 미만	$A = 0.33V + 28.05$
200만 이상 ~ 500만 미만	$A = 0.165V + 61.05$
500만 이상 ~ 1000만 미만	$A = 0.0385V + 124.3$
1000만 이상	$A = 0.0044V + 158.4$

참고) A : 교부금의 교부한도액 (단위 : 백만엔)

V : 석유저장시설 저장량 합계량 (단위 : 만kl)

제6조 (교부기간 등)

제4조 제1항에 정하는 교부금은 석유저장시설 설치공사가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년도로부터 당해 석유저장시설 설치공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년도까지의 기간에 행해진 교부대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해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경제산업대신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교부대상사업이 당해기간 내에 종료하지 않은 때는 2 년에 한해 해당기간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교부금은 매 회계년도에 이루어지는 교부대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해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전조 제1항의 교부금은, 가능한 한, 각 회계연도에 균등하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도도부현은 원칙적으로 제4조 제1항의 교부금에 있어서는 40%를, 동조 제2항의 교부금에 있어서는 70 %를, 석유저장시설의 설치지점이 속하는 시정촌이 행하는 공공용 시설의 정비사업에 관한 간접교부사업에 충당하여야한다.

제9조 (교부금 교부신청)

교부금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도도부현은 매년 5월 16일부터 5월 31일 또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직접교부사업 및 간접교부사업마다 양식 제1에 의한 신청서 2통 (정본 1통 및 사본 1통)에 양식 제2호에 의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도부현은 전항의 교부금의 교부신청에 있어, 당해 교부금에 관한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에 관한 매입공제세액 (교부대상경비에 포함되는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상당액 중, 소비세법의 규정에 따라 매입에 관계된 소비세액으로 공제가능한 부분의 금액 및 당해금액에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곱해 얻은 금액의 합계액에 보조율을 곱해 얻은 금액을 말한다. 이하 동일)을 감액해 교부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시에 당해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에 관한 매입공제세액이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교부결정) 경제산업대신은 전조의 신청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해, 교부금의 교부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내용 및 이것에 첨부 조건을 기재한 교부금 교부 결정통지서를 통해 도도부현에 통지한다.

2. 전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도달한 후 당해 신청에 관한 전항에 의한 교부결정을 하기까지 통상 요구되는 표준기간은 3개월로 한다.

3. 제1항의 교부금 교부결정내용에는 다음에 말하는 비목마다 경비배분을 포함한다.

1) 사업비

가. 공사비

나. 용지비 및 보상비

다. 조사설계비

라. 부대잡비

2) 기금조성비

가. 시설정비기금

나. 유지보수기금

4. 경제산업대신은 제 1항에 의한 교부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전조 제 2항에 따라 교부금에 관한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에 관한 매입공제세액에 대해 감액교부신청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를 심사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에 관한 매입공제

세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한다.

5. 경제산업대신은 전조 제2항의 단서에 따른 교부신청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교부금에 관한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에 관한 매입공제세액에 대하여 교부금액 확정에서 감액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취지의 조건을 붙여 교부결정을 하여야한다.

제 11조 (교부조건)

경제 산업 대신은 교부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전조 제3항의 경비배분을 변경 (2 이상의 비목에 관계된 배분액 중 적은 금액의 2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배분액의 유용을 하고자하는 경우를 제외)하려고 할 때는 경제산업대신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전조 제1항의 결정에 따른 교부대상사업 (이하 "교부금 업")의 시행에 관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교부금사업의 운영상 경쟁입찰에 의한 것이 현저하게 곤란 또는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에 의해야 한다.

3. 교부금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제산업대신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4. 교부금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제산업대신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5. 교부금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교부금 사업의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제산업대신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신청취하)

교부금 교부신청을 한 도도부현은 제 1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 당해 통지에 관계된 교부금의 교부 결정내용 또는 이에 첨부된 조건에 불복할 때, 교부금의 교부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취하를 하고자하는 자는 교부결정통지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양식 제3에 의한 신고서 2통 (정본 1통 및 사본 1통)을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상황보고)

제 10조 제 1항의 결정을 받은 도도부현 (이하 "교부대상 도도부현")은 경제산업대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양식 4에 의한 보고서 2통 (정본 1통 및 사본 1통)을 경제산업대신이 요구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 (실적보고 및 평가보고)

교부대상 도도부현은 교부금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교부금사업 폐지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당해 교부금사업 완료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의 4월 10일 중 빠른 날 (교부금사업이 완료하지 않고 국가의 회계년도가 종료한 경우는 다음 회계년도의 4월 20일)까지, 양식 제5에 의한 실적보고서 2통 (정본 1통 및 사본 1통)을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부대상 도도부현은 전항의 실적보고를 함에 있어 교부금에 관계된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관련 매입공제세액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에 관한 매입공제세액을 감액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교부대상 도도부현은 제 1항의 실적보고서 외에도 교부금사업 완료일 또는 교부금사업 폐지 승인이 있는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한 날까지 당해 교부금사업 성과평가를 기재 한 양식 제 5에 의한 평가보고서 2통 (정본 1통 및 사본 1통)을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그러나 경제산업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일을 늦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보고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당해 평가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의 이용 기타 방법으로 공표 할 수 있다.

제 15조 (교부금액 확정)

경제산업대신은 교부금사업 완료 또는 폐지에 관계되는 전조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수리한 때, 그 내용심사 및 필요에 따라 행하는 현재조사 등에 의해 교부되어야 하는 교부금액을 확정하여 교부대상 도도부현에 통지해야 한다.

2.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금액을 확정할 때, 다음 각호에서 열거하는 당해 교부금에 관련된 사항을 인터넷 이용 기타방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1) 교부금사업 명칭
- 2) 교부금사업 실시장소
- 3) 교부금사업 개요
- 4) 교부금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교부금액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에 관계된 매입공제세액 확정에 수반되는 교부금의 반환)

제16조 교부대상 도도부현은 교부대상사업 완료 후에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신고에 따라 교부금에 관계된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에 관계되는 매입공제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양식 제

6조에 따른 보고서 2통(정본 1통, 사본1통)을 즉시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경제산업대신은 전항 보고가 있을 시, 당해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에 관계된 매입공제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해야 한다.

3. 전항의 반환기간은 당해 명령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하고, 기한내에 납후가 안 된 경우는 미납에 관계된 금액에 대해 그 미납에 관계된 기간에 따라 연리 10.9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해야 한다.

제17조 (교부결정 취소)

경제산업대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제 10조 제1항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교부대상 도도부현이 제11조 규정에 따라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교부대상 도도부현이 교부금을 교부금 사업 이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교부대상 도도부현이 제13조, 제14조 또는 다음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앞의 3개 호에서 열거한 경우 외에 교부대상 도도부현이 교부금의 교부결정내용 기타 법령 또는 이에 근거한 경제산업대신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교부금 사업에 관계되는 석유저장시설 설치공사가 중지 또는 폐지된 경우

제18조 (재산처분 제한)

교부대상 도도부현은 교부금사업에 의해 취득하거나 효용을 증가시킨 재산에 관해, 교부금사업 완료후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고 교부금사업 교부목적에 따라 그 효율적 운용을 도모해야 한다.

2. 교부대상 도도부현은, 교부금사업에 따라 취득하거나 효용을 증가시킨 부동산, 설비 기타 재산(취득가격 및 효용증가가격이 단가 50만엔 미만의 것은 제외)을 교부금 교부목적에 반해 사용하고, 양도, 교환,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 양식 제7조에 따른 신청서 2통(정본1통, 사본1통)을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경제산업대신이 별도로 정한 재산처분제한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19조(교부금 지불)

교부금은 제15조 규정에 따라 교부되어야 하는 교부금액을 확정된 후 지불해야 한다. 단,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개산지불 할 수 있다.

2. 교부대상 도도부현은 전항 규정에 따라 교부금 지불을 받으려고 할 경우, 양식 제8조에 따른 청구서 2통(정본1통, 사본1통)을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교부금사업 경리)

교부대상 도도부현은 교부금사업 경리에 관해, 교부금사업 이외의 경리와 명확히 구분하여 수지상황을 회계장부에 따라 명확하게 해놓음과 동시에, 회계장부 및 수지에 관한 증거서류를 교부금사업이 완료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 종료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21조(교부금 조서)

교부대상 도도부현은 당해 교부금사업에 관련된 사업에 세출예산서 및 결산서의 계상과목 및 과목별 계상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식 제9조에 따른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22조(시정촌 합병이 있는 경우의 특례)

대상구역을 일부로 포함하는 시정촌 합병이 행해진 경우, 경제산업대신이 도도부현에 교부해야 하는 교부금 한도액은 제5조 규정에 관계없이 당해 시정촌 합병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년도의 익년도 이후 10년도의 각년도에 한해, 또는 당해 시정촌 합병전 구역(이하 '구 시정촌')으로 존속한 경우에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단, 시정촌 합병후에 당해 구역내에서 석유저장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따라 당해 각호에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시정촌 합병전까지 신설 또는 증설공사가 개시된 석유저장시설에 관계된 교부금 또는 구 시정촌으로 존속한 경우에 산정된 액

2) 당해 시정촌 합병후에 신설 또는 증설공사가 개시된 석유저장시설에 관계된 제4조 제1항 교부금 합병후의 시정촌(이하, '신 시정촌')으로 산정된 액

3) 당해 시정촌 합병후에 신설 또는 증설공사가 개시된 석유저장시설에 관계된 제4조 제2항의 교부금 신시정촌의 석유저장시설 저장량 합계량에 따라 제5조 제2호에서 열거하는 산식에 따라 산출해 얻은 금액에서, 신시정촌에서 시정촌 합병전까지 신설 또는 증설공사가 개시된 석유저장시설 저장량 합계량에 따라 동호에서 열거하는 산식에 따라 산출해 얻은 금액을 공제한 액

2. 전항의 경우(전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열거한 경우를 제외)의 제3조 및 제8조 규정 적용에 관해서는, 제3조 제5항 중 「령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상구역」이라고 있는 것은, 「석유저장시설 설치가 그 구역내에서 행해지고 있고, 또는 행해질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합병전 시정촌의 구역 및 이에 인접하는 합병전 시정촌구역(제4조 제1항 교부금에서, 석유저장시설 설치의 원활화에 기여하기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들 합병전 시정촌의 구역 및 당해 인접하는 합병전 시정촌구역에 인접하는 합병전 시정촌 구역) 또는 이들 구역을 그 일부로 포함하는 합병후 시정촌 구역」과, 제8조 중 「시정촌이 행함」이라고 있는 것은, 「당해 시정촌 합병전의 구역에서 행함」이라고 한다.

별표 (제3조 관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교부금 공공용 시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교부금	①도로 ②항만 ③어항 ④도시공원 ⑤수도 ⑥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시설 ⑦통신시설 ⑧환경위생시설 ⑨교육문화시설 ⑩의료시설 ⑪사회복지시설 ⑫국토보전시설 ⑬소방에 관한 시설 ⑭농림수산업에 관한 공동이용시설 ⑮상공업 기타 산업(농림수산업 제외)에 관한 공동이용시설
(비고)	
<p>① 국가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은 제외. 단, 당해사업의 경비에 대한 국가 부담 또는 보조비율이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일정비율 '이내'비율에서 부담 또는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포함) 이외의 것에 관해서는, 석유저장시설 설치의 원활화에 기여하기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교부대상으로 할 수 있음.</p> <p>② 각의결정에 관한 공공사업관계 장기계획에 관한 공공용 시설에 있어서는, 각각 시설정비를 소관하는 성청의 시설정비방침과 충분히 조정된 것이어야 함.</p>	

② 일본 후쿠시마현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등 교부금교부 요강

(최종개정 2011년 4월 28일)

제1조 (취지)

현은, 석유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용 시설에서, 석유저장시설 설치에 수반해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의 정비를 도모하여, 석유저장시설 설치의 원활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정촌 등에 대해 후쿠시마현 보조금 등의 교부 등에 관한 규칙 및 동 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석유저장 시설입지대책 등 교부금(이하, '교부금')을 교부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 등 교부금 교부규칙 및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예에 따른다.

제3조 (교부대상 및 교부액)

교부금은 시정촌 및 그 외의 자(이하, '시정촌 등')가 석유저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에 수반되어 공공용 시설정비사업(이하, '교부대상사업')을 행하는 경우, 당해교부대상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시정촌 등에 대해 교부하는 것으로 하고, 그 액수는 교부대상사업마다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교부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사가 정하는 액으로 한다.

제4조 (교부금 교부신청)

규칙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신청은 양식 제1에 따른 신청서 3통(정본1통 및 사본2통)에 양식2에 따른 설명서를 첨부하고, 제출기한은 5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또는 10월1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한다.

2.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지예산서는 첨부 필요없다.

3. 시정촌 등은 전항의 교부금 신청시, 당해 교부금에 관계되는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에 관계된 매입공제세액(교부대상경비에 포함되는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상당액 중, 소비세법의 규정에 따라 매입에 관계되는 소비세액으로서 공제가능한 부분의 금액 및 당해금액에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 세율을 곱해 얻은 금액합계액에 보조율을 곱해 얻은 금액을 말함. 이하 동일)을 감액해 교부신청해야 함. 단, 신청시 당해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에 관계된 매입공제세액이 명확한 것에 관해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5조 (교부금 교부결정)

규칙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교부금 교부결정내용에는,다음에 열거하는 항목마다 경비배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사업비

① 공사비 ② 용지비 및 보상비 ③조사설계비 ④부대집비

(2)기금구성비

① 시설정비기금 ② 유지보수기금

2. 지사는, 전항에 따른 교부결정을 행할 시, 전조 제3항에 따라 교부금에 관계된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에 관계된 매입공제세액에 관해 감액해 교부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이를 심사해 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에 관계된 매입공제세액을 감액해야 한다.

3. 지사는, 전조 제3항의 단서에 따라 교부신청된 것에 관해서는, 교부금이 관계된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에 관계된 매입공제세액에 관해 교부금액 확정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그 취지조건을 붙여 교부결정을 한다.

제6조 (교부금의 교부조건)

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별표와 같이 한다.

2. 규칙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별도로 정한 사항은, 전조의 결정에 관계된 교부대상사업(이하 ‘교부금사업’) 실시에 관해 계약하는 경우에, 교부금사업 운영상 경쟁입찰에 따르는 것이 현저히 곤란 또는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쟁입찰에 따라야 한다.

제7조 (변경 등의 승인신청)

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에 따라 지사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양식 제3에 따른 교부금사업변경(중지·폐지) 승인신청서를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신청 취소)

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르는 신청취소는, 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통지가 있었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양식 제4에 따르는 신청취소 신고서를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교부금 개산지불)

지사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개산지불 방법에 따라 교부금 교부를 할 수 있다.

제10조 (상황보고)

시정촌 등은, 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구한 때, 교부금 사업 실시상황에 관해 양식

제5에 따른 상황보고서를 지사가 요구하는 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사업완료 보고)

시정촌 등은 당해사업이 완료한 때, 즉시 양식 제6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실적보고 및 평가보고)

규칙 제13조에 규정하는 실적보고는 양식 제7조에 따른 실적보고서 3통(정본 1통, 사본 2통)을 교부금사업이 완료한 날(사업폐지에 관해 지사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 20일을 경과한 날 또는 당해 교부금사업 완료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3월31일 중 빠른 날까지 지사에게 제출해서 행해야 한다.

2. 시정촌 등은, 전항 실적보고를 하는데 있어, 교부금에 관한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에 관한 매입공제세액이 명확한 경우, 당해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에 관한 매입공제세액을 감액해 보고해야 한다.

3. 시정촌 등은 제1항의 실적보고서 외, 교부금사업이 끝나료한 날 또는 교부금사업 폐지승인이 있던 날부터 70일을 경과한 날까지, 당해 교부금사업 성과평가를 기재한 양식 제7의 2에 따른 평가보고서 3통(정본 1통 및 사본 2통)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그 기일을 미루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3조 (교부금액 확정)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교부금사업 성과확인을 위한 조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2. 지사는, 전항 조사를 한 때는 양식 제8에 따른 교부금사업성과확인서를 작성해 그 결과를 명확하게 해놓아야 한다.

3. 제1항 규정에 따른 조사성과, 교부금사업 성과가 교부금 결정내용 및 이에 붙인 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교부해야하는 교부금액에 관해 양식 제9에 따른 교부금액 확정조서에 따라 확정해 당해 교부금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4.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금액을 확정할 때, 다음 각호에서 열거하는 당해 교부금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이용 기타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1) 교부금사업 명칭

(2) 교부금사업 실시장소

(3) 교부금사업 개요

(4) 교부금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교부금액

제 14조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에 관한 매입공제세액 환정에 수반하는 교부금 반환)

교부대상 시정촌 등은, 교부대상사업 완료 후에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신고에 따라 교부금에 관한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에 관한 매입공제세액이 확정된 경우, 양식 제10조에 따른 보고서 3통(정본 1통, 사본 2통)을 즉시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지사는, 전항의 보고가 있던 경우, 기일을 정해 당해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매입공제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교부결정 취소)

지사는 규칙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르는 것 외,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 규칙 제5조 제1항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정촌 등이 제10조, 제11조, 제12조 또는 다음 조 및 규칙 제18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교부금사업에 관계된 석유저장시설 설치공사가 중지 또는 폐지된 경우

제16조(재산처분 제한)

시정촌 등은 교부금사업에 따라 취득하거나 효용을 증가시킨 재산에 관해서는 교부금사업 완료후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고 교부금사업 교부목적에 따라 그 효율적 운용을 도모해야 한다.

2. 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사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때, 양식 제11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다.

3. 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별도로 정하는 것은, 설비 기타재산(취득 가격 및 효용 증가가격이 단가 50만엔 미만의 것은 제외)으로 한다.

제17조(교부금 교부청구)

교부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시정촌 등이 제9조 규정에 따라 교부금 개산지불 교부를 받으려고 할 때, 또는 교부금 사업이 완료해 제12조 규정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교부금 지불을 받으려고 할 때는 양식 제12조에 따라 지불청구서를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교부금사업 경리)

시정촌 등은 교부금사업 경리에 관해, 교부금사업 이외 경리와 명확히 구분해, 그 수치 상황을 회계장부에 따라 명확히 해둠과 동시에, 그 회계장부 및 수지에 관한 증거서류를

교부금사업이 완료한 날이 속한 회계연도 종료후 5년간 보존해두어야 한다.

제19조 (교부금 조서)

시정촌 등은 당해 교부금사업에 관련된 세출예산서 및 결산서의 계상과목 및 과목별 계상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식 제13조에 따른 교부금조서를 작성해두어야 한다.

제20조 (동일본대지진에 의한 재해대응)

동일본대지진에 관해 재해구조법 적용을 받은 시정촌은, 당해 시정촌 구역의 복구 및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환경 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하, '복구·부흥 사업')을 실시할 경우, 제1조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열거한 경우에 따라 각각에 정하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당해 시정촌 청사 등의 손괴 기타 사정에 의해 당해 시정촌 행정기능이 손실된 경우 복구·부흥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에관해 교부금 교부신청할 것
2. 1 이외의 경우

복구·부흥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당해 시정촌 청사 등의 건설 또는 유지보수에 관한 것을 제외)에 관해 교부금 교부신청을 할 것

별표 (제6조 관계)

경비 배분의 경미한 변경	내용의 경미한 변경
2 이상의 비목에 관한 배분액의 어느것이 낮은 금액의 20% 이내 범위내에서 당해 배분액을 유용하는 변경	<p>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교부금액 변경을 일으키지 않는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시공 개소변경으로, 공사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 2 구조 및 공법 변경으로, 공사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 및 규모변경으로 당초설계에 기반한 공사정도를 현저히 변경하는 것 3 기기 및 비품사양 변경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것 4 공사구분마다 내용, 수량, 금액을 크게 변경하는 것

③ 후쿠시마현 히로노정 방재행정무선정비사업기금 조례

(2008년 12월 19일 조례 제28호)

제1조 (설치)

히로노정 방재행정무선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241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해, 히로노정 방재행정무선정비사업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한다.

제2조 (적립)

기금은 후쿠시마현 석유저장시설입지등 대책교부금 중, 기금조성비에 관한 것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에서 정하는 외,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기금적립을 할 수 있다.

제3조 (관리)

기금에 속하는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금 기타 가장 확실하고 유리한 방법에 의해 관리해야 한다.

2. 기금에 속하는 현금은 필요에 따라 가장 확실하고 유리한 유가증권으로 바꿀 수 있다.

제4조 (수익금 관리)

기금관리에서 생긴 수익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해 기금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처분)

기금은, 히로노정 방재행정무선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할 경우에 한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제 6조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외, 기금관리 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장(町長)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④ (아이치현) 타치시 석유저장시설입지등 교부금기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2년 3월 27일 조례 제1호)

제1조 (취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41조 규정에 근거해 타치시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등 교부금기금(이하, 기금)에 관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본 시(市)는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등 교부금(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등 교부금교부규칙에 의해 교부된 교부금을 말함. 이하 동일)에 관한 사업(이하, 석유저장시설설립대책등 교부금사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 (적립)

기금으로 적립하는 액은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등 교부금 중, 매년도 예산에서 정하는 액으로 한다.

제4조 (기금관리)

기금에 속하는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금 기타 가장 확실하고 유리한 방법에 의해 관리해야 한다.

제5조 (수익금 관리)

기금 운용에서 생긴 수익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해 이 기금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처분)

기금은,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등 교부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재원에 충당할 경우에 한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제 6조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외, 기금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집 필 자 ■

연구 책임 · 이민정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전략연구 2015-38 · 충청남도에너지 정제/저장시설 입지지역에 대한지원방안 연구
-주변지역지원제도 도입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논의를 중심으로-

글쓴이 · 이민정 /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6년 X월 XX일 / 발행 · 2016년 X월 XX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172(산업경제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323-0 03350

<http://www.cni.re.kr>

© 2015,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